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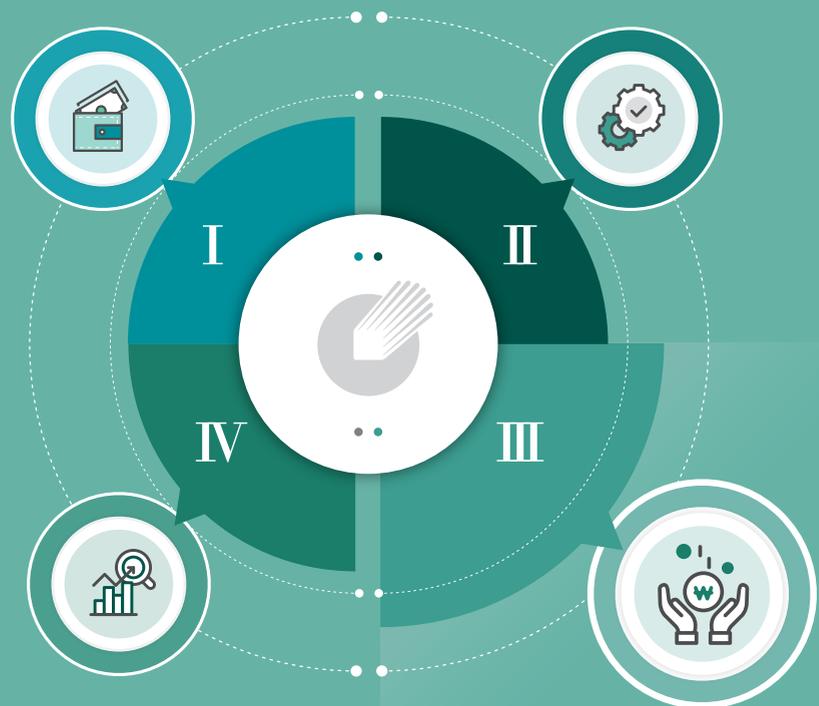
2023.3.31.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전망

2023 경제전망 III

2023 Economic Outlook III

[소득 부문]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 경제전망 Ⅲ

- 소득 부문 -

2023 경제전망 III

- 소득 부문 -

총괄 | 진익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이상은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직무대리
정원철 경제분석관
황종률 경제분석관

작성 |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유근식 경제분석관
김상미 경제분석관
김상용 경제분석관

지원 | 이하영 행정실무원
송예나 자료분석연구원

「2023 경제전망 시리즈」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GDP성장률 및 주요 부문별 경제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와 의제 설정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 02) 6788-4749 | psad@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3 경제전망 Ⅲ

- 소득 부문 -

2023. 3.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3. 3. 2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경제정책의 추진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에 대한 고려와 함께 성장의 과실이 경제주체에게 분배되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접근법을 이용한 GDP는 경제성장이 노동(피용자보수)과 자본(영업잉여), 정부(순생산 및 수입세) 등 경제주체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망을 통해 경제정책에 유용한 근거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비교를 통해 분배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상황을 파악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시성 있는 정책의제 발굴과 국회의 예결산·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0월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 발간 이후 변화된 국내외 경제여건을 분석하여 총 4권으로 구성된 「2023년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제 III 권에서는 한 해의 국내경제를 분배국민소득 측면에서 분석·전망하고 있습니다.

분배국민소득의 측면에서 보는 2023년의 경제전망은 모든 항목이 지난 10월 전망보다 낮게 조정되었습니다.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전년보다 축소되는 가운데 저임금일자리 증가 등으로 임금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며, 그에 따라 피용자보수 증가율도 전년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자본에 대한 투자 둔화로 고정자본소모도 전년보다 낮은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생산 및 수입세와 영업잉여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지만, 증가율은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효율적인 경제정책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NABO 2023년 소득 및 고용 전망]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22 ^f	2023 ^f
명목 국내총생산(GDP)	3.4	1.4	0.8	6.7	3.8	3.7
피용자보수	5.3	5.2	2.4	6.1	6.9	4.5
영업잉여	-1.1	-9.0	-7.1	5.3	-3.3	3.5
고정자본소모	5.7	6.3	4.7	8.2	5.9	3.2
순생산 및 수입세	2.7	1.5	4.2	10.0	-0.4	1.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 한국은행(실적치)

(단위: 만명, %)

	2021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f	하반기 ^f	연간 ^f
취업자 수 증감 (증감률)	36.9 (1.4)	94.1 (3.5)	69.2 (2.5)	81.6 (3.0)	18.9 (0.7)	10.6 (0.4)	14.7 (0.5)
고용률	60.5	61.6	62.5	62.1	61.8	62.4	62.1
경제활동참가율	62.8	63.7	64.1	63.9	64.1	64.4	64.2
실업률	3.7	3.2	2.5	2.9	3.5	3.2	3.3
고용							
임금근로자 비중	76.1	76.6	76.5	76.5	76.8	76.9	76.9
비임금근로자 비중	23.9	23.4	23.5	23.5	23.2	23.1	23.1
- 자영업자	20.2	20.0	20.1	20.1	19.8	19.9	19.8
- 무급가족종사자	3.7	3.4	3.4	3.4	3.4	3.2	3.3
임금상승률	4.6	5.8	4.1	4.9	3.4	3.5	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 한국은행·통계청·고용노동부(실적치)

[분배국민소득의 구성비]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22 ^f	2023 ^f
명목 국내총생산(GD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피용자보수	45.7	47.5	48.2	47.9	49.3	49.7
영업잉여	25.8	23.1	21.3	21.0	19.6	19.5
고정자본소모	18.9	19.8	20.6	20.9	21.3	21.2
순생산 및 수입세	9.6	9.6	9.9	10.2	9.8	9.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 한국은행(실적치)

[분배국민소득의 성장기여도]

(단위: %, %p)

	2018	2019	2020	2021	2022 ^f	2023 ^f
명목 국내총생산(GDP)	3.4	1.4	0.8	6.7	3.8	3.7
피용자보수	2.4	2.4	1.2	2.9	3.3	2.2
영업잉여	-0.3	-2.3	-1.6	1.1	-0.7	0.7
고정자본소모	1.1	1.2	0.9	1.7	1.2	0.7
순생산 및 수입세	0.3	0.1	0.4	1.0	0.0	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 한국은행(실적치)



I. 분배소득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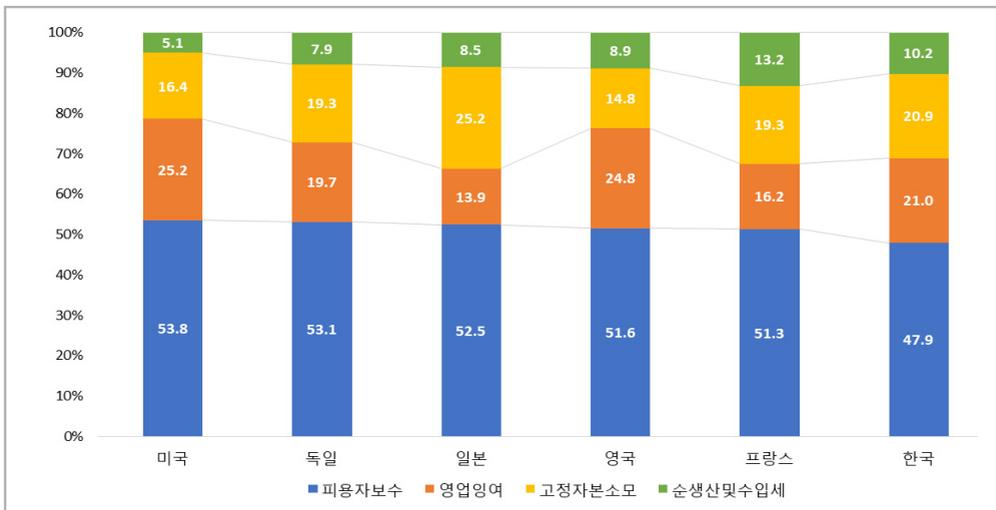
□ 국민소득통계는 생산과 분배,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을 기록

- 분배국민소득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이 노동과 고정자본, 정부, 기업에 분배된 현황을 파악
 -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는 과세표준 전망의 기초자료로 활용
- 1980~2021년 기간 동안 피용자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3%에서 47.9%로, 고정자본소모는 9.6%에서 20.9%로 상승한 반면, 영업잉여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이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피용자보수 비중이 낮은 편

- 2021년 기준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구조를 비교하면, GDP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47.9%로 미국(53.8%), 독일(53.1%), 일본(52.5%), 영국(51.6%), 프랑스(51.3%) 보다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영업잉여의 비중은 21.0%로 미국(25.2%), 영국(24.8%), 보다 낮으나 일본(13.9%), 프랑스(16.2%), 독일(19.7%)보다 높은 수준

| 주요국의 2021년 분배국민소득 구조 |



주: 영업잉여와 고정자본소모를 합산하여 발표하는 국가의 경우 고정자본소모를 차감하여 산정
 자료: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0702>)

II. 분배국민소득 및 고용 전망

[2023년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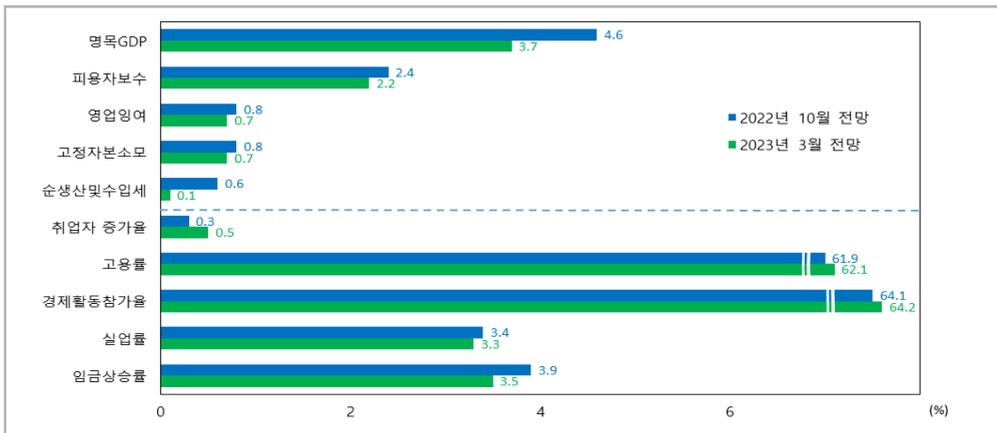
□ 발표된 명목GDP 실적치에 따라 2022년 노동과 자본의 소득 하향 조정

- 2022년 명목GDP는 중기전망 전망치 대비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 분배국민소득 중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의 증가율 하향 조정
 - 2022년 분배국민소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명목GDP 성장률 실적치에 기반하여 2022년 분배국민소득 구성항목을 수정 전망하였음
- 2022년 고용변수 중 경제활동참가율과 임금상승률은 전망과 실적치가 일치, 취업자증가율과 고용률, 실업률은 고용시장 호조로 0.1%p의 차이

□ 2023년 분배국민소득의 모든 구성항목 증가율 하향 조정

- 임금상승률 및 제조업 생산 전망치 하향 조정 등에 따라 피용자보수(-0.3%p), 영업잉여(-0.8%p), 순생산 및 수입세(-4.5%p)의 증가율 하향 조정
 - 고정자본소모(-0.7%p)는 지난해 높은 증가세의 기저효과를 반영하여 하향 조정
- 2023년 고용은 외국인력 확대, 요양·돌봄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취업자 증가율 0.2%p 상향 조정, 임금상승률은 경기둔화, 저임금 종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0.4%p 하향 조정

| 2023년 전망의 분배부문별 기여도 비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분배국민소득 전망]

□ 2023년 피용자보수는 전년대비 증가세 둔화 전망

-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 및 임금상승 둔화로 2023년 피용자보수는 전년(6.9% 추정)보다 2.4%p 낮은 4.5% 증가할 전망

□ 2023년 영업잉여는 전년도 부진을 넘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전년도 기저효과와 서비스업 증가 전망 등으로 2023년 영업잉여는 전년(-3.3% 추정)보다 6.8%p 높은 3.5% 증가할 전망

□ 2023년 고정자본소모는 전년에 이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자본에 대한 투자 증가율 둔화 전망 등으로 2023년 고정자본소모는 전년(5.9% 추정)보다 2.7%p 낮은 3.2% 증가할 전망

□ 2023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전년대비 증가세 상승 전망

- 상품무역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실질 순생산물세와 GDP디플레이터 전망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전년(-0.4% 추정)보다 1.7%p 높은 1.3% 증가할 전망
 - 명목GDP 대비 비율은 피용자보수 49.7%, 영업잉여 19.5%, 고정자본소모 21.2%, 순생산 및 수입세 9.6%로 전망

| 분배국민소득 전망 |



주: 분배국민소득 항목별 전망치는 모두 명목을 기준으로 하며, 음영부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고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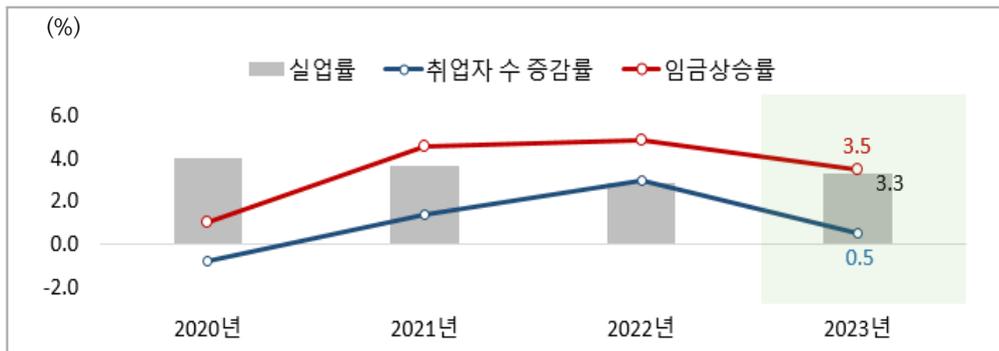
□ 2023년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증가세 둔화 전망

- 2023년 취업자 수는 전년(3.0%)보다 2.5%p 낮은 0.5% 증가할 전망
 - 경제성장률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 지난해 고용 호황의 기저효과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여 전년대비 증가세 둔화
 - 반면, 외국인력 확대 및 업종제한 유연화, 해외 관광객 유입 증가, 요양·돌봄 서비스 관련 노동수요의 증가는 취업자 수 변화의 상방요인으로 작용
- 고용률은 62.1%로 전년과 동일한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이 64.2%로 0.3%p 상승하여 실업률은 전년대비 0.4%p 상승한 3.3% 전망
-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전년대비 0.4%p 상승한 76.9%, 자영업자 비중은 0.3%p 하락한 19.8%로 전망
 -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 상승 및 자영업자 비중 하락 추세 지속

□ 2023년 임금상승률은 전년보다 상승세 둔화 전망

- 2023년 임금은 전년(4.9%)보다 1.4%p 낮은 3.5% 상승할 전망
 - 경제의 성장 둔화가 임금상승률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노동시장의 딱딱함(tightness) 완화, 저임금 일자리 증가 등도 임금상승의 하방요인으로 작용
 - 반면, 지난해에 물가가 크게 올랐고, 올해에도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이 예상되어 임금상승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주요 고용지표 및 임금상승률 전망 |



주: 음영부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고용노동부



Ⅲ. 주요국 고용 동향 및 전망

□ 주요국의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일본과 독일은 감소세

- 잠재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의 증가율은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
- 2023년 한국 및 주요국의 노동가능인구는 낮은 수준의 증가 또는 감소 전망
 - 한국(0.4%)과 미국(0.85%), 영국(0.64%), 프랑스(0.39%)는 1% 미만 증가
 - 독일(-0.13%)과 일본(-0.36%)은 노동가능인구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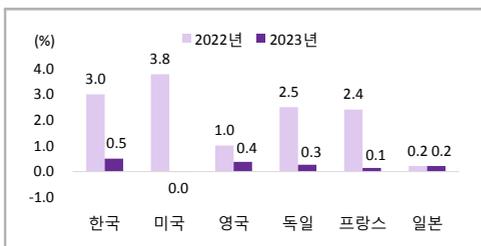
□ 2023년 주요국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대부분 전년대비 둔화 전망

- 영국과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의 2023년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전년대비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한국(2.2%→0.8%), 독일(1.7%→0.8%), 미국(1.9%→0.6%), 프랑스(1.9%→0.5%)에서 하락, 영국(0.2%→1.0%), 일본(-0.1%→0.1%)은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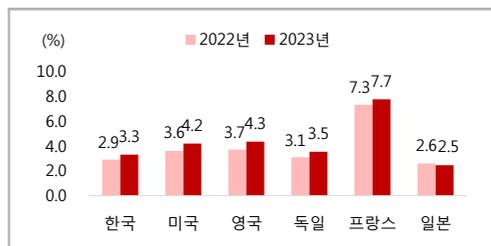
□ 2023년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의 실업률 상승,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 전망

-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주요국 취업자 수 증가율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한국(3.0%→0.5%), 미국(3.8%→0.0%), 영국(1.0%→0.4%), 독일(2.5%→0.3%), 프랑스(2.4%→0.1%), 일본(0.2%→0.2%)
-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의 실업률은 고용 둔화의 영향으로 상승 전망
 - 한국(2.9%→3.3%), 미국(3.6%→4.2%), 영국(3.7%→4.3%), 독일(3.1%→3.5%), 프랑스(7.3%→7.7%), 일본(2.6%→2.5%)

| 주요국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 |



| 주요국 실업률 전망 |



주: 한국 자료는 2022년 실측치(통계청)와 2023년 전망치(국회예산정책처)를 제시하였고, 그 외 국가들은 OECD의 2022~2023년 전망치를 제시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OECD Employment Outlook 2022





[제 I 부 분배국민소득 동향]

제1장 분배국민소득 동향 3

제2장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구조 14

[제 II 부 분배국민소득 및 고용 전망]

제1장 2023년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21

 제1절 분배국민소득 21

 제2절 고용 25

제2장 피용자보수 27

제3장 영업잉여 31

제4장 고정자본소모 34

제5장 순생산 및 수입세 36

제6장 고용 39

 제1절 주요 고용지표 전망 39

 제2절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중 전망 53

 제3절 임금상승률 전망 55

 제4절 고용 관련 정책 검토 59

[제 Ⅲ 부 주요국 고용 동향 및 전망]

제1장 한국 및 주요국 노동가능인구 전망 비교	67
제2장 한국 및 주요국 고용전망 비교	70



[BOX 1] 피용자보수 증가율 실측치와 추정치 간 차이의 원인	29
[BOX 2] 법인영업잉여 전망	33
[BOX 3] 성별·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 분해	43

[제 I 부]

표 I-1 실질 총자본형성	11
표 I-2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2022년)	13

[제 II 부]

표 II-1 2022년도 분배국민소득 증기전망과 수정전망 비교	22
표 II-2 2023년도 분배국민소득 증기전망과 수정전망 비교	23
표 II-3 2023년 분배국민소득 수정전망의 구성비	24
표 II-4 2023년 고용 수정전망	26
표 II-5 임금근로자 수 및 임금상승률 전망	28
표 II-6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임금근로자 수	30
표 II-7 국세 및 지방세수입 추이	37
표 II-8 성별 취업자 수 증감	43
표 II-9 2023년 고용 전망	49
표 II-10 2023년 고용 전망 수치 변화(NABO 증기전망 대비)	50
표 II-11 2023년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	59
표 II-12 고용허가제(E-9) 연도별 도입 쿼터	62



[제 I 부]

그림 I-1	비용자보수 및 GDP 대비 비중	3
그림 I-2	임금근로자 소득	5
그림 I-3	노동비용의 구성	5
그림 I-4	임금근로자 수와 임금	5
그림 I-5	영업잉여 및 GDP 대비 비중	6
그림 I-6	제도부문별 영업잉여의 증감	7
그림 I-7	영업잉여와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	8
그림 I-8	자영업자 비중 및 증가율	8
그림 I-9	고정자본소모 및 GDP 대비 비중	10
그림 I-10	고정자본형성	10
그림 I-11	순생산 및 수입세와 총수입	12
그림 I-12	국민계정상 세금 및 보조금의 분류 체계	12
그림 I-13	주요국의 2021년 분배국민소득 구조	14
그림 I-14	주요국의 GDP 대비 비용자보수 비중	15
그림 I-15	주요국의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	15
그림 I-16	주요국의 GDP 대비 고정자본소모의 비중	16
그림 I-17	주요국의 GDP 대비 순생산 및 수입세 비중	17

[제 II 부]

그림 II-1	2022년 분배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비교	22
그림 II-2	2023년 분배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비교	24
그림 II-3	2022년 전망과 실적치 간 차이	25
그림 II-4	비용자보수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28

그림 차례

그림 II-5	피용자보수 증가율 전망	28
그림 II-6	국민계정 피용자보수 증가율과 추정치 비교	29
그림 II-7	영업잉여 결정요인	32
그림 II-8	영업잉여 증가율 전망	32
그림 II-9	법인영업잉여 추이와 모형별 전망	33
그림 II-10	고정자본소모와 주요 결정요인의 관계	35
그림 II-11	고정자본소모 증가율 전망	35
그림 II-12	순생산 및 수입세와 주요 결정요인의 관계	37
그림 II-13	주택매매거래량	37
그림 II-14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 전망	38
그림 II-15	취업자 수 변화	40
그림 II-16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변화	40
그림 II-17	실업률 변화	40
그림 II-18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41
그림 II-19	서비스업 특성별 취업자 수 증감	41
그림 II-20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42
그림 II-21	연령별 취업자 수(계절조정) 비중	42
그림 II-22	취업자 수 변화 분해	44
그림 II-23	15~29세 취업자 수 변화 분해	44
그림 II-24	30대 취업자 수 변화 분해	45
그림 II-25	40대 취업자 수 변화 분해	46
그림 II-26	50대 취업자 수 변화 분해	46
그림 II-27	고령층 취업자 수 변화 분해	47
그림 II-28	빈일자리 변화	48
그림 II-29	세계 및 한국 경제성장률	49



그림 II-30 GDP와 취업자 수 간 관계 (1998~2022년)	49
그림 II-31 직접일자리 예산 및 인원 변화	51
그림 II-32 외국인 근로자 쿼터 변화	51
그림 II-33 보건복지업 취업자 수 변화	52
그림 II-34 요양보호사 변화	52
그림 II-35 임금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	54
그림 II-36 자영업자 증감	54
그림 II-37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수준 및 임금상승률 변화	55
그림 II-38 상용직 임금변화 분해	56
그림 II-39 임시·일용직 임금상승률 분해	56
그림 II-40 2022년 상·하반기 산업별 임금상승률	57
그림 II-41 실업률과 빈일자리율	58
그림 II-42 빈일자리율과 임금상승률	58
그림 II-43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수	60

[제 III 부]

그림 III-1 주요국 노동가능인구 변화 추이 및 전망	69
그림 III-2 주요국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전망	71
그림 III-3 주요국 실업률 전망	71
그림 III-4 주요국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	72

2023 경제전망 Ⅲ

소득부문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분배국민소득 동향

제1장 분배국민소득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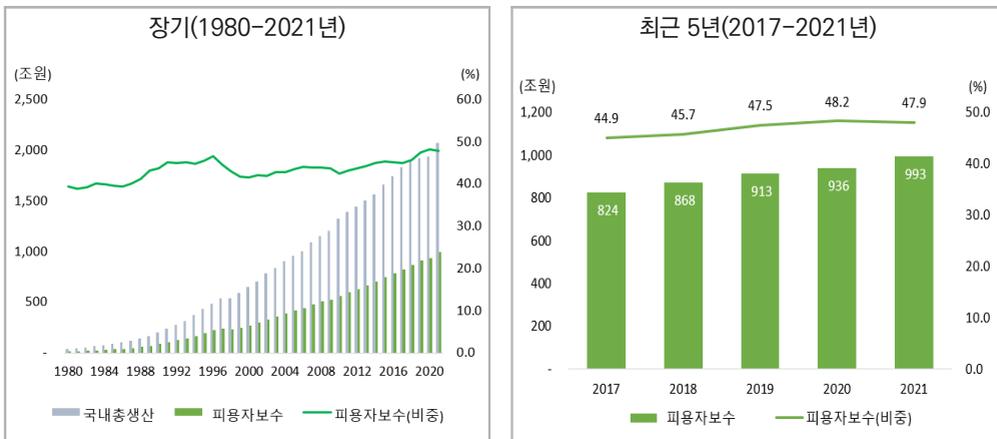
제2장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구조

1. 피용자보수

-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는 피용자보수는 노동이 생산에 참여하고 받은 몫
 - 임금 및 급여, 고용주 부담 사회부담금
- GDP대비 피용자보수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상승세

분배국민소득은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경제주체에 배분되는 몫을 파악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므로 구성비의 변화를 주요 동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¹⁾ 1980~2021년 기간 동안 피용자보수의 GDP대비 비중은 39.3%에서 47.9%로 8.6%p 상승하였다. 1990년 중반까지 피용자보수의 비중이 상승하였으나 외환위기로 감소하면서 41.5%까지 하락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의 비중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상승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 그림 I-1 | 피용자보수 및 GDP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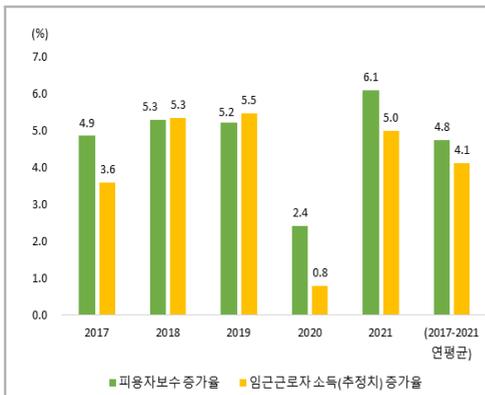
1) 분배국민소득 전망의 의의는 2022년 10월에 발간한 「2023년 및 중기경제전망」 IV권 참고. 분배국민소득은 당해연도 부가가치의 분배에 의미가 있으므로 명목가만 이용한다. 이에 본고의 분배국민소득 전망도 모두 명목을 기준으로 한다.

피용자보수는 노동에 분배된 소득이긴 하지만, 피고용자가 고용주와 계약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이므로 자영업자나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노동비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용자가 수행한 대가로 기업이 지급한 현금 및 현물 총액을 의미하므로 임금 뿐 아니라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 및 급여성 대가와 고용주가 지급하는 사회부담금도 포괄한다.²⁾ 따라서 피용자보수는 노동에 대한 직접소득과 간접소득을 포함한다. 피용자보수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근로자의 소득³⁾과 비교해보았다.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수와 연평균 급여를 곱하여 구하는데, 2017~2021년 동안 연평균 상승률이 4.1%로 피용자보수의 상승률 4.8%보다 낮았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2020년에 임금근로자 소득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낮아져 전년대비 0.8% 증가에 그쳤지만, 피용자보수는 2.4% 상승하여 피용자보수가 경제위기시 충격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최근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간접노동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간접노동비용⁴⁾은 임금 및 급여 외에 사업자가 피고용자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2017~2021년의 간접노동비용 증가율은 4.4%p로 직접노동비용보다 연평균 0.7%p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이 견조할수록 간접노동비용이 증가하여 피용자보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노동시장은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피용자보수에 간접노동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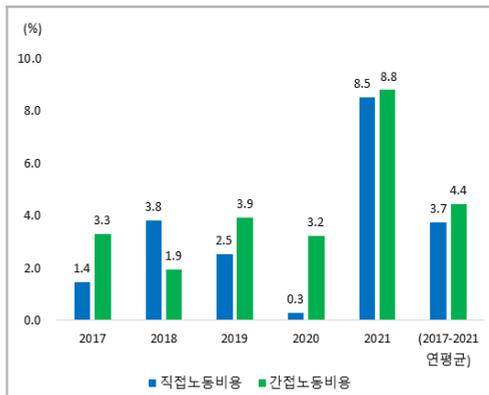
-
- 2) 피용자보수는 임금 및 급여와 각종 수당, 통근비 등 보조수당, 특별보너스, 피고용자가 받는 커미션, 봉사료, 기타 피고용자 가족들이 사용하는 주거서비스, 피고용자가 작업장 밖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유니폼, 피고용자가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차량 또는 기타 내구재의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피고용자가 무상 또는 할인가격으로 이용하는 경우, 피고용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스포츠 및 휴양시설, 통근수송, 주차, 피고용자 자녀의 탁아소, 피고용자가 주택, 가구 등을 구입할 때 고용주가 저리 대출을 제공한 경우 고용주의 이자부담액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수혜자로 하여 사회보장기구나 민간기금, 사회보험기금 등에 납부하는 실제 사회부담금과 고용주가 비기금형 사회수혜금으로 제공하는 귀속 사회부담금을 포함한다. (자료: 연미숙, “분기 분배국민소득 집계방법 연구”, 한국은행, 2002)
 - 3)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수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임금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동 조사는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 임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6월의 급여를 이용하여 월평균 임금으로 공표하는 조사통계의 특징을 갖는다. 한편 가장 최근의 임금 정보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 조사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근로자 등이 포함되지 않아 종사자수가 다소 적지만, 가장 빠른 임금 동향을 제공한다.
 - 4) 직접노동비용은 정액·초과 급여, 성과급 및 상여금이며, 간접노동비용은 퇴직급여 등의 비용, 법정 노동비용, 법정의 복지비용, 교육훈련 비용, 채용 관련 비용 등을 의미한다.

| 그림 I-2 | 임금근로자 소득



자료: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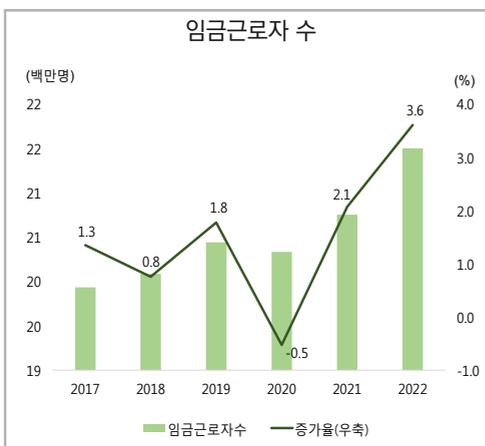
| 그림 I-3 | 노동비용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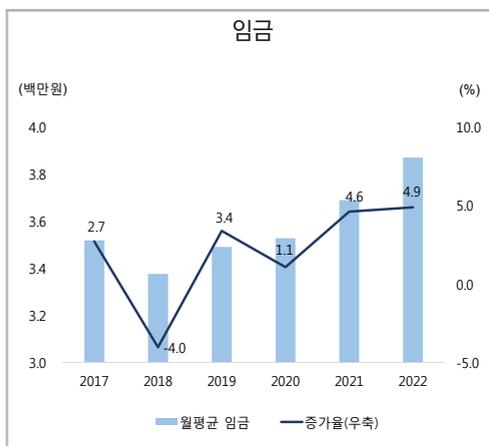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2022년 임금근로자 소득 산정을 위한 2022년 임금근로자 수와 명목임금은 전년 대비 각각 3.6%와 4.9% 상승했다. 따라서 2022년 임금근로자 소득은 예년보다 높은 상승률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그림 I-4]는 임금이 가장 빠르게 발표되는 「사업체 노동력조사」로 임금수준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다 높으며, 최근 상승률도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사업체노동력조사」가 고정사업장 혹은 사업장 소속이 있는 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상승기에는 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그림 I-4 | 임금근로자 수와 임금



자료: 통계청,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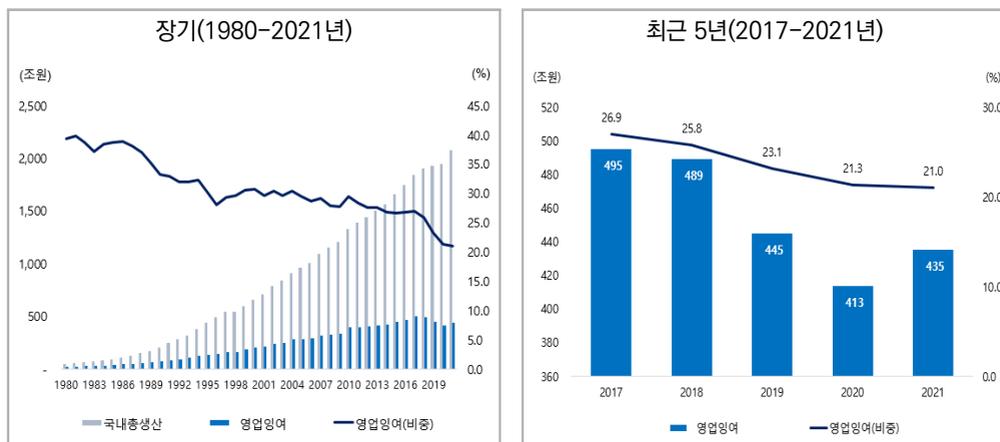
2. 영업잉여

-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는 총 부가가치에서 기업에 분배된 몫
 -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법인 및 비법인 기업의 잉여
- GDP 대비 영업잉여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하락세

한 해 동안의 생산활동 결과 발생한 국민소득은 임금과 지대, 이자, 이윤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임금을 의미하는 피용자보수를 제외한 지대, 이자, 이윤이 영업잉여이다. 즉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지대, 로얄티, 이자)과 기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윤)을 의미한다. 이때 기업은 법인 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의 비법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혼합소득(mixed income)을 포함한다.

1980년 이후 영업잉여 비중은 장기추세로 감소하고 있다. 자본의 한계수익률이 낮아지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하며, 지대 상승률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명목 GDP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영업잉여 수준값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하여, 2019년 영업잉여는 전년대비 9.0% 하락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7.1% 감소하였다. 따라서 영업잉여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낮아져 2017년 26.9%에서 2021년에는 GDP대비 21.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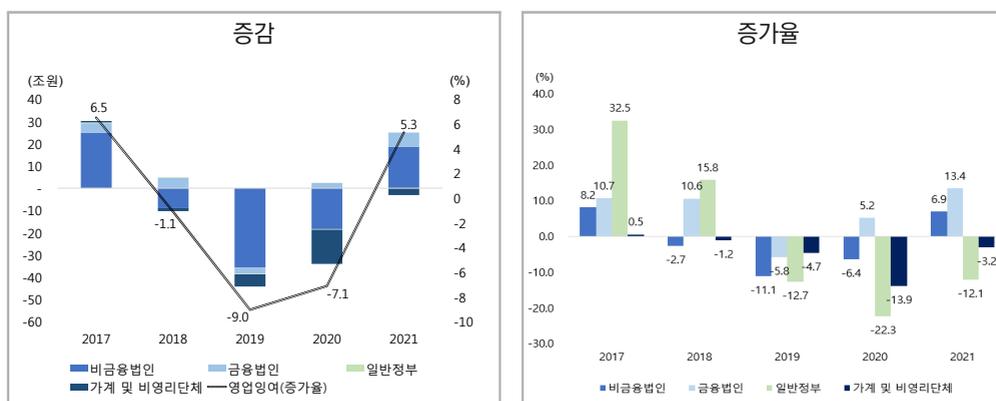
그림 I-5 | 영업잉여 및 GDP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상 영업잉여를 확인하면 법인 중 비금융부문의 영업잉여가 전체 영업잉여의 65% 내외를 차지하는데, 2019년에 11.1% 하락한데 이어 2020년에도 6.4% 하락하여 전체 영업잉여의 하락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영업잉여 감소에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친 부문은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는 2018년에 1.2% 하락한데 이어 2021년까지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2020년에는 13.9% 하락하였다.

그림 I-6 | 제도부문별 영업잉여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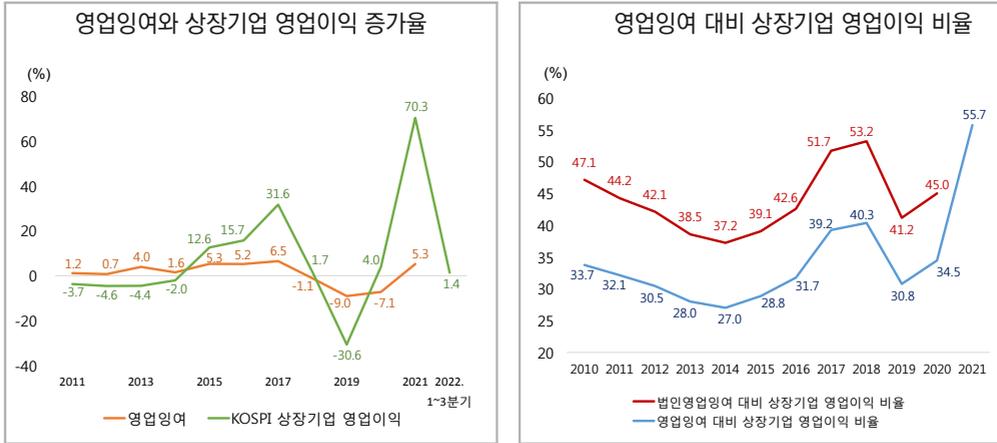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법인 영업잉여는 기업 손익계산서의 이익항목 중 영업이익과 개념상 가장 유사하다. 따라서 회계자료가 제공되는 KOSPI 상장기업의 영업이익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KOSPI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2020년 4.0%에서 2021년 70.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영업잉여는 -7.1%에서 5.3%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변동성이 크나, 영업잉여와 변동의 방향은 유사한 점이 있어, 국민소득의 영업잉여에서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약 3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21년 상장기업의 영업이익(70.3%)이 크게 상승하면서 영업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55.7%)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Fn 가이드5)에 따른 2022년 1~3분기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에 그치고 있어 2022년 영업잉여 증가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Fn가이드는 금융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전 상장 및 외감 기업의 연간, 분기 재무제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데이터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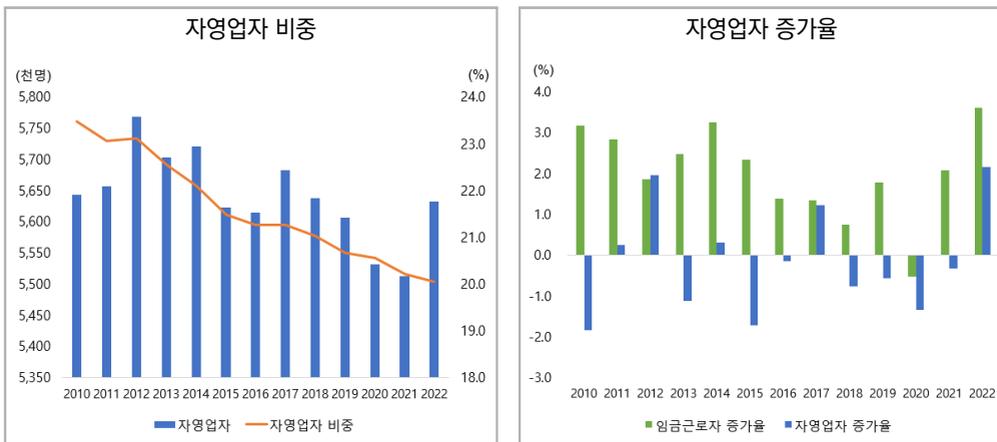
그림 I-7 | 영업잉여와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



주: 2022년은 1~3분기 영업이익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Fn가이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감소는 자영업자 비중 감소와 연관된다. 영업잉여에는 자영업자의 혼합소득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영업자가 감소하면서 영업잉여 총량도 감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3.5%에서 2022년 20.1%로 3.4%p 감소했다. 2010년 이후 자영업자 수는 12년 중 8년 동안 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만 감소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자영업자 감소는 영업잉여에 포함되던 혼합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그림 I-8 | 자영업자 비중 및 증가율



자료: 통계청

3. 고정자본소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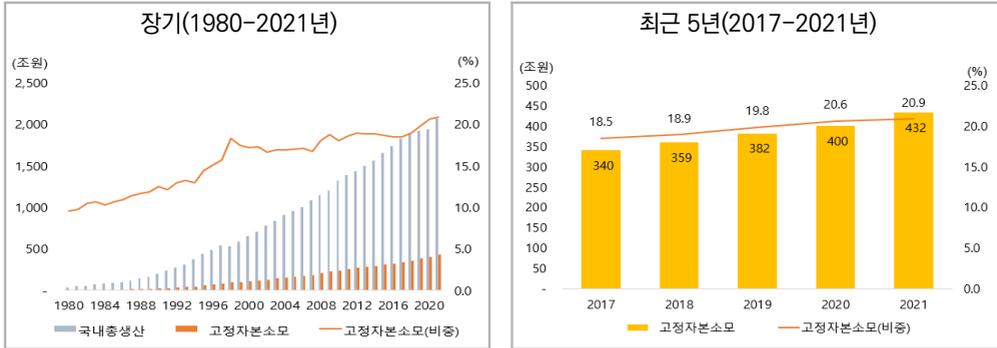
- **고정자본소모**는 생산활동에 사용된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분
- GDP 대비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상승세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는 한 해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소모된 고정자본의 가치를 의미한다.⁶⁾ 생산활동에 사용된 고정자산이 마모되거나 진부화되어 가치가 감소하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경제구조가 자본집약형으로 자본의 비중이 커질수록 고정자본소모도 커지게 된다.

이에 1980년 이후 우리 경제의 고정자본소모의 몫은 장기추세로 상승하고 있다. 1980년에는 GDP 대비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은 9.6%에서 2021년에는 20.9%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코로나19와 같이 경제 충격이 오는 경우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이 상승을 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외환위기 전후를 비교하면, 1996년 GDP대비 15.1%였으나, 1999년에는 17.5%로 2.4%p 상승했으며, 금융위기 당시에는 2007년 16.8%에서 2009년 18.8%로 2.0%p 상승했다. 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본투자를 확대하였고 그 결과 고정자본소모의 비중도 단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하여도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은 2019년 19.8%에서 2021년에는 20.9%로 1.1%p 상승하여 피용자보수(0.2%p)와 순생산 및 수입세(0.6%p)보다 분배국민소득 내에서 비중확대 규모가 컸다. 다만 고정자본소모의 GDP내 비중은 일정하게 증가하기보다는 증가 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다시 반등하는 형태를 가졌다.

6)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고정자본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유형고정자산과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한다. 하지만 귀금속, 보석 등 시간이 흘러도 실질가치가 감소하지 않고 생산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귀중품이나, 토지, 광물, 기타 지하자원 등은 고정자본소모의 대상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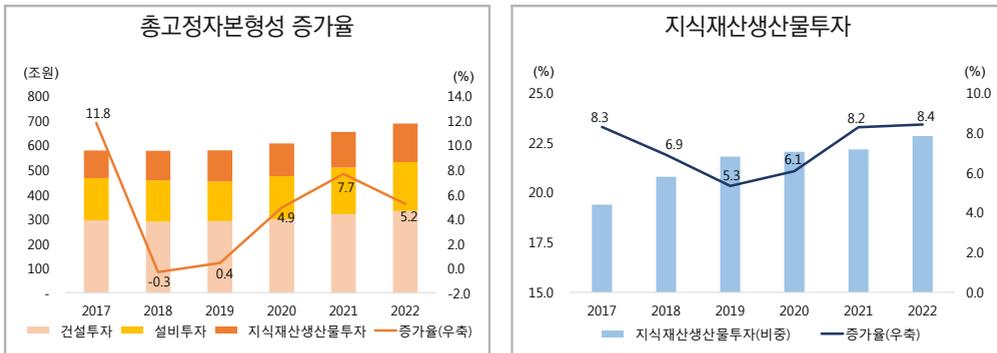
그림 I-9 | 고정자본소모 및 GDP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고정자본소모는 고정자본형성과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 고정자본형성이 증가할수록 차기 고정자본소모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기술발전의 영향이 큰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증가할수록 고정자본소모가 확대될 수 있다. 2021년의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년대비 7.7%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5.2% 증가했다. 특히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각각 8.2%와 8.4%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I-10 | 고정자본형성



자료: 한국은행

실질 가치로 표현된 총고정자본형성은 최근 5년간 연평균 0.24%의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5년간 일정한 성장률을 보인 것이 아니라, 2018, 2019, 2022년은 전년대비 총고정자본형성이 줄었으며, 2020년과 2021년은 총고정자본형성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연도마다 등락이 있었다. 이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지식재산생산물투자와는 다르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음(-)의 성장률을

보인 연도가 많았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최근 5년간 2020년을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투자량이 줄었다.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 변동 폭이 매우 컸다. 2021년의 경우 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22년에는 전년대비 -0.5% 증가율을 보이는 등 해마다 크게 변하였다.

표 I-1 | 실질 총자본형성

(단위: 전년대비 %)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고정자본형성	-2.2	-2.1	3.5	2.8	-0.8
건설투자	-4.6	-1.7	1.5	-1.6	-3.5
설비투자	-2.3	-6.6	7.2	9.0	-0.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4	3.1	3.4	4.4	4.7

자료: 한국은행

4. 순생산 및 수입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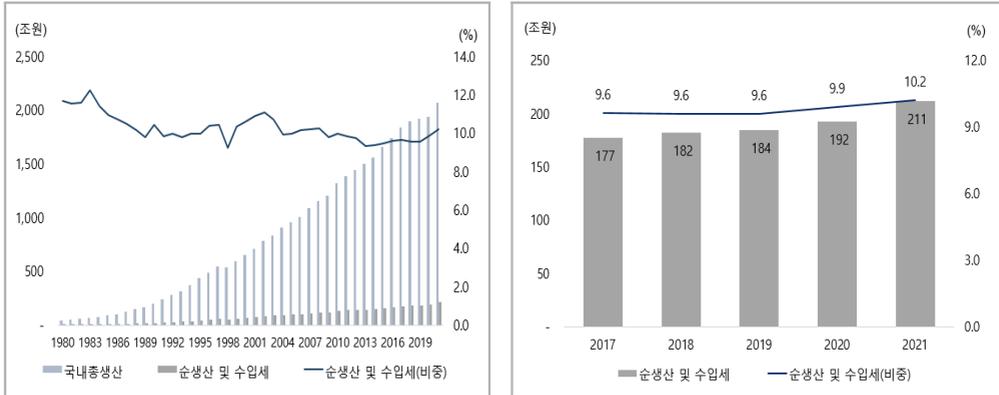
- **순생산 및 수입세**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GDP 대비 순생산 및 수입세의 비중은 장기적으로는 하락하였으나, 최근 5년(2017~2021)에는 다소 상승

순생산 및 수입세는 생산 및 수입세(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⁷⁾에서 보조금(subsidies)⁸⁾을 제한 값으로 생산활동에서 정부에 분배된 몫으로 볼 수 있는데, 순생산 및 수입세의 비중은 1980년 11.7%에서 2021년 10.2%로 1.5%p 감소하였다. 세금은 순생산 및 수입세와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순생산 및 수입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와 자본세의 비중이 증가하며 간접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7) 국민계정체계에서는 간접세 대신에 생산 및 수입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각종 조세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를 결정하기 어렵고 경제학에서도 간접세 등의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생산 및 수입세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로 구성된다.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동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고 기타생산세는 생산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조세와 고용된 노동력 또는 피용자보수에 대한 조세이다.

8) 보조금(subsidies)은 정부가 생산자의 생산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인데, 대중교통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 석탄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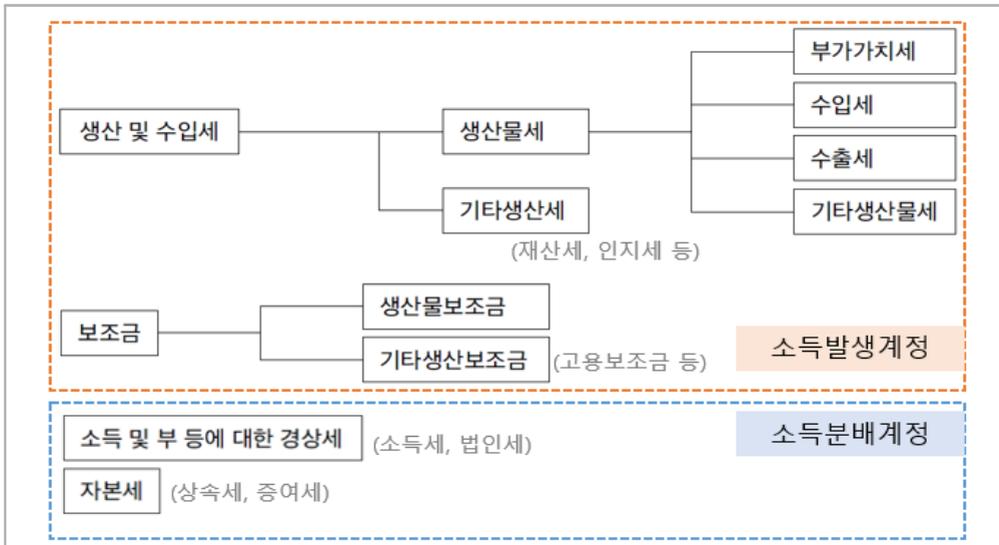
그림 I-11 | 순생산 및 수입세와 총수입



자료: 한국은행

순생산 및 수입세는 아래와 같이 순생산물세(생산물세-생산물보조금)와 순기타생산세(기타생산세-기타생산보조금)로 나뉘어지는데 순생산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순생산물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37.1%), 취득세(16.9%), 지방소비세(9.5%), 교통에너지 환경세(8.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12 | 국민계정상 세금 및 보조금의 분류 체계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에 포함된 세금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⁹⁾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동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고 기타생산세는 생산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조세와 고용된 노동력 또는 피용자보수에 대한 조세이다.

표 I-2 |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2022년)

(단위: 억원)

생산물세			기타생산세		
국세	- 부가가치세	816,266	국세	- 인지세	7,988
	- 개별소비세	93,182		- 종합부동산세	67,988
	- 주세	37,665	지방세	- 등록면허세 ²⁾	21,550
	- 증권거래세	63,029		- 지역자원시설세	18,411
	- 관세	103,241		- 주민세 ²⁾	22,829
	- 교통에너지환경세	111,164		- 재산세	149,743
	- 교육세 ¹⁾	46,444		- 자동차세 ²⁾	83,546
- 농어촌특별세 ¹⁾	70,132	- 지방소득세 ²⁾	199,593		
지방세 · 지방 교육세	- 취득세	337,166			
	- 레저세	1,060			
	- 지방소비세	178,166			
	- 지방교육세 ¹⁾	75,986			
	- 담배소비세	35,579			

주: 1)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재원별로 생산물세, 기타생산세, 경상세로 나누어 배분되나 세입총액을 제시

2)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는 기타생산세 및 경상세로 나누어 배분되나 세입총액을 제시

3) 지방세는 2021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9) 전체 세금 중에서 생산물세, 기타생산세, 경상세의 구분은 12페이지 [그림 I-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장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구조

OECD 회원국은 모두 분배국민소득을 발표하고 있다. 38개국이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을 모두 편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구조를 비교하면, 한국은 피용자보수의 비중이 가장 작고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 비중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비중이 작고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미국은 피용자보수의 비중이 53.8%로 높으면서도 영업잉여가 25.2%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피용자보수 비중이 높은 53.1%인데, 영업잉여는 19.7%로 낮은 편이다. 일본도 피용자보수가 52.5%로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고정자본소모도 25.2%로 높은 특징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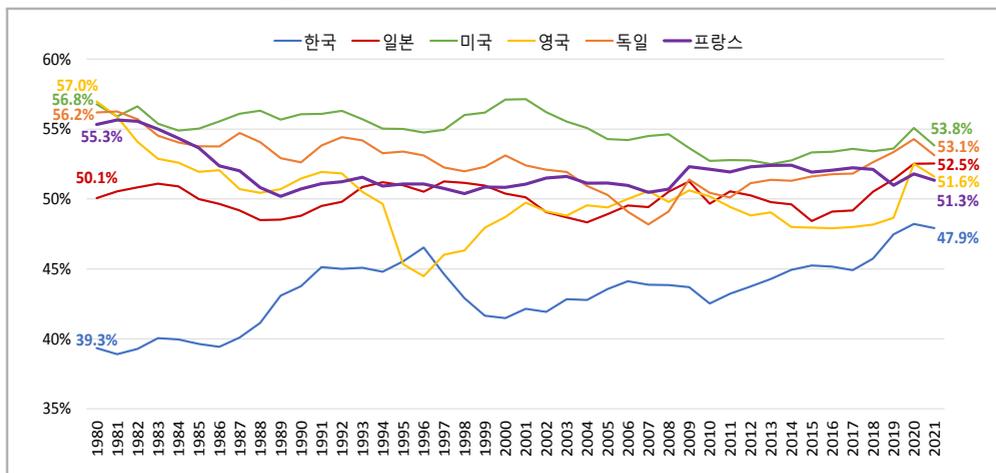
그림 I-13 | 주요국의 2021년 분배국민소득 구조



주: 영업잉여와 고정자본소모를 합산하여 발표하는 국가의 경우 고정자본소모를 차감하여 산정
 자료: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0702>)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비중을 장기 시계열로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분배국민소득의 변화가 보다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피용자보수 비중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한국을 제외한 5개국(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은 장기적으로 하향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본, 미국, 영국, 독일은 2017년부터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본, 미국, 독일의 피용자보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우리나라의 피용자보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지만 2021년 기준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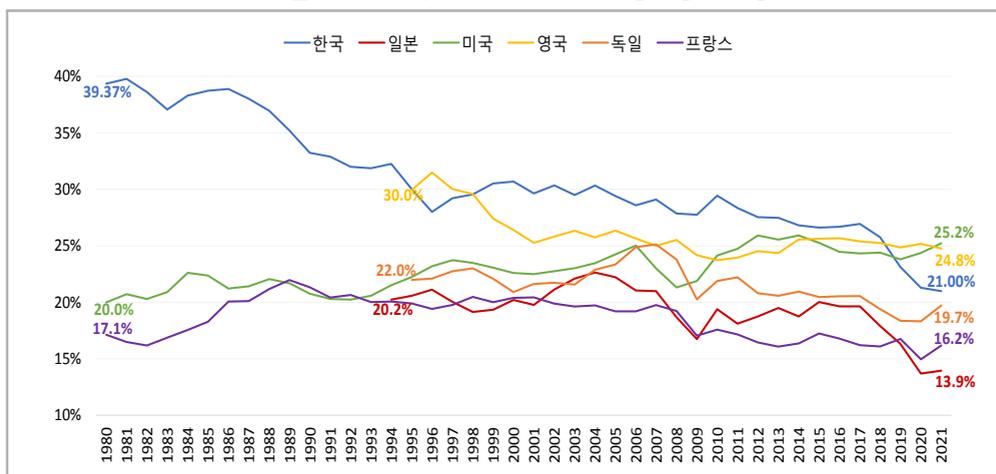
그림 I-14 | 주요국의 GDP 대비 피용자보수 비중



자료: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0702>)

기업과 자영업자의 소득인 영업잉여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하락률이 높았다. 2020년은 코로나19 등의 요인으로 기업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컸지만, 그 이전에도 점진적인 하락추세가 있었다. 영업잉여의 감소와 피용자보수 비중의 증가를 기업 대비 노동의 몫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피용자보수는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은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OECD 평균(17.4%)보다 높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24.4%)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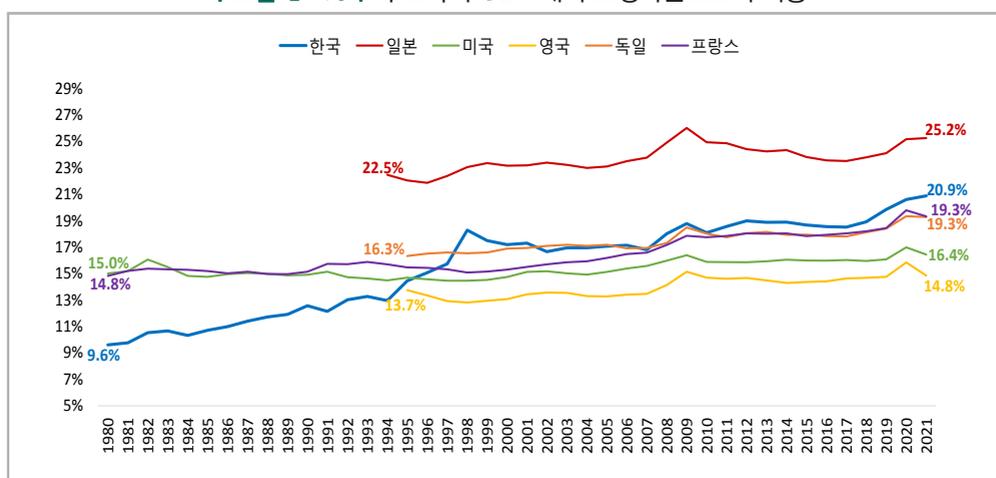
그림 I-15 | 주요국의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



자료: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0702>)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안정적인 항목이다. 그러나 고정자본소모의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은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이 커서 2021년 25.3%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국과 미국은 고정자본소모가 각각 14.8%와 16.4%로 낮은 편이다. 일본은 장치산업의 비중이 크고 GDP대비 투자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미국과 영국은 자국내 장치산업의 비중이 적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OECD는 우리나라의 고정자본소모를 2021년 기준 20.9%로 추정하였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자본이 생산에 투입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고정자본소모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2000년 이후에 더욱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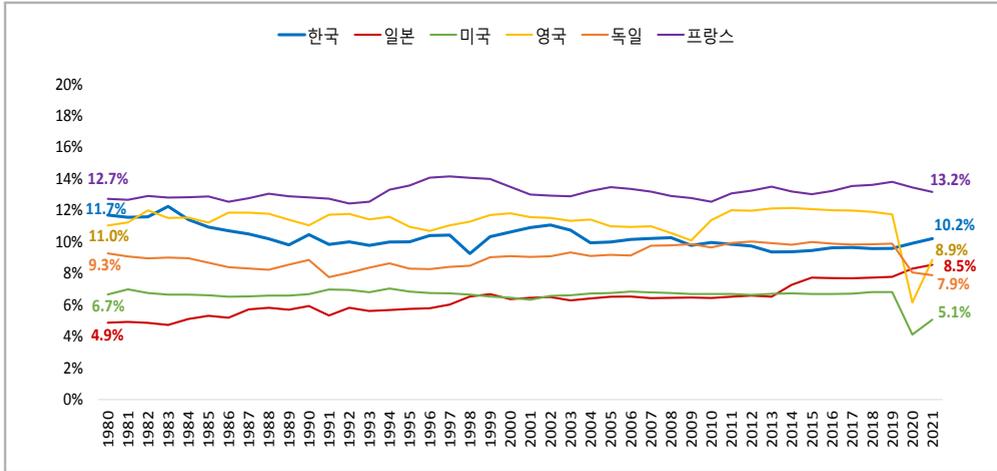
그림 I-16 | 주요국의 GDP 대비 고정자본소모의 비중



자료: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0702>)

순생산 및 수입세는 간접세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의 10% 내외를 차지한다. 다만 코로나19의 대응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의 순생산물 수입세가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본은 부가가치세율을 높임에 따라 주요국 중 상대적으로 낮은 6%대에서 8.5%로 높아졌다.

그림 I-17 | 주요국의 GDP 대비 순생산 및 수입세 비중



자료: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0702>)

2023 경제전망 Ⅲ

소득부문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I

분배국민소득 및 고용 전망

제1장 2023년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2장 피용자보수

제3장 영업잉여

제4장 고정자본소모

제5장 순생산 및 수입세

제6장 고용

제1절 분배국민소득

1. 2022년 전망 수정 요인

2022년 명목GDP 성장률 실적치(3.8%)와 NABO 중기전망¹⁰⁾ 전망치(4.7%)의 차이는 0.9%p로 나타났다. 2022년 명목GDP 감소에 따라 분배국민소득의 구성항목에 대한 전망도 새롭게 추정하였다.¹¹⁾

먼저 현 전망에서 2022년 피용자보수는 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지난 중기전망 당시 전망한 증가율(8.3%) 대비 1.4%p 낮은 수치이다. 피용자보수의 구성항목인 임금 외 비급여여성 비용 중 복리후생비용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 증가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피용자보수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였다.

영업잉여는 중기전망(-2.2%)과 현 전망(-3.3%) 간에 -1.1%p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전망치 조정에는 기업경영분석과 Fn가이드, KIS-Value등의 자료에서 제시된 3/4분기까지의 법인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 하락을 고려하였다. 현 전망에서 추정한 영업잉여 변화율은 중기전망과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지만 감소폭은 확대되었다.

고정자본소모 증가율 전망치는 중기전망 당시 3.4%였으나, 현 전망은 5.9%로 2.5%p 상승하였다. 실질 고정자본에 대한 감가상각률이 안정적이므로, 이를 전망에 반영한 수정전망 결과 고정자본소모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다.

순생산 및 수입세의 중기전망(4.6%)과 현 전망(-0.4%) 간 차이는 -5.0%p로 높은 수준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2022년 국세수입은 법인세(47.1%)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15.1% 증가하였으나, 국세 수입 중에서 생산 및 수입세는 전년대비 3.0%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순생산물세 잠정치가 -0.6%로 발표되었다. 아직 지방세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작년도 주택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¹²⁾ 생산 및 수입세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10)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2022.10월 발간) 기준

11) 2023년 3월 31일 기준, 2022년 명목GDP 성장률(잠정)은 발표되었지만 분배국민소득은 발표되지 않아, 발표된 명목GDP 성장률에 기반하여 2022년 분배국민소득 구성항목을 수정 전망하였다.

12) 2021년 주택거래량은 101.5만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50.9만건으로 49.9% 감소하였다.

에 포함되는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 II-1 | 2022년도 분배국민소득 중기전망과 수정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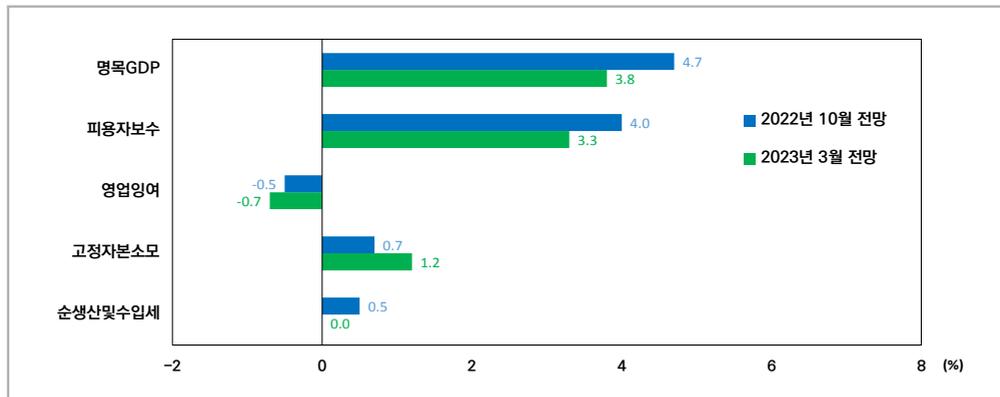
(단위: %, %p)

	중기전망 (’22.10월)	수정전망 (’23.3월)	차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4.7	3.8	-0.9
피용자보수	8.3	6.9	-1.4
영업잉여	-2.2	-3.3	-1.1
고정자본소모	3.4	5.9	2.5
순생산 및 수입세	4.6	-0.4	-5.0

주: 차이는 수정전망(23.3월)치에서 중기전망(22.10월)치를 뺀 값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수정전망과 지난 10월 중기전망의 명목GDP 성장률 차이(-0.9%p)를 부분별 성장 기여도로 살펴보면 피용자보수 -0.7%p, 영업잉여 -0.2%p, 순생산 및 수입세 -0.5%p 하향 조정되었고, 고정자본소모 0.5%p 상향 조정되었다.

그림 II-1 | 2022년 분배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2023년 수정 전망 요인

2023년 명목GDP 수정 전망(3.7%)은 NABO 중기전망¹³(4.6%) 대비 0.9%p 하향 조정되었다.

비용자보수는 고용 전망의 수정 결과를 반영하여 중기전망(4.8%) 대비 0.3%p 하향 조정하였다. 중기전망 대비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는 소폭 확대되나, 경기둔화와 저임금근로자의 비중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임금상승률이 하락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자보수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였다.

영업잉여는 제조업 생산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을 반영하여 중기전망(4.3%) 대비 0.8%p 하향 조정하였다. 지난 중기전망에서 2023년 제조업의 실질부가가치는 2.3% 증가할 것으로 보았으나, 이번 전망에서는 0.5% 감소로 조정되었다.¹⁴⁾

고정자본소모는 중기전망(3.9%) 대비 0.7%p 하향 조정된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고정자본소모의 경우, 중기전망 때와는 다른 추계방식을 도입함으로써 2022년 전망치가 크게 상향 조정되었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2023년의 고정자본소모 증가율은 하향 조정되었다.

순생산 및 수입세는 중기전망(5.8%) 대비 4.5%p 하향 조정된 1.3% 증가를 전망하였다. 전세계적 경제성장 둔화와 교역 감소로 생산과 수출이 모두 감소하고, 실질 순생산물세와 GDP디플레이터 전망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였다.

표 II-2 | 2023년도 분배국민소득 중기전망과 수정전망 비교

(단위: %, %p)

	중기전망 ('22.10월)	수정전망 ('23.3월)	차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4.6	3.7	-0.9
비용자보수	4.8	4.5	-0.3
영업잉여	4.3	3.5	-0.8
고정자본소모	3.9	3.2	-0.7
순생산 및 수입세	5.8	1.3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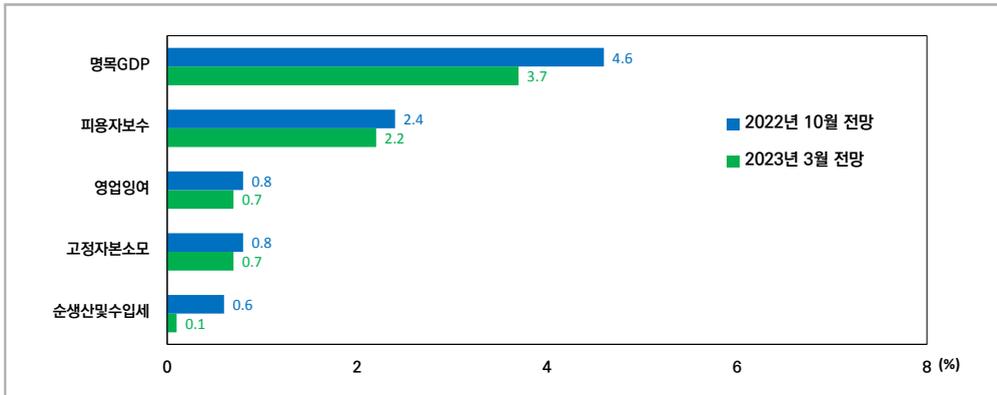
주: 차이는 수정전망('23.3월)치에서 중기전망('22.10월)치를 뺀 값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3)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2022.10월 발간) 기준

14) 산업별 전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3 경제전망 II: 생산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정전망과 지난 10월 중기전망의 명목GDP 성장률 차이(-0.9%p)를 부분별 성장 기여도로 살펴보면 피용자보수 -0.2%p, 영업잉여 -0.1%p, 고정자본소모 0.1%p, 순생산 및 수입세 -0.5%p 하향 조정되었다.

| 그림 II-2 | 2023년 분배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분배국민소득 수정전망 결과 GDP 대비 구성비는 피용자보수 49.7%, 영업잉여 19.5%, 고정자본소모 21.2%, 순생산 및 수입세 9.6% 수준이다. 2023년도 국내총생산, 수출입 전망이 모두 하향조정되고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의 급감 등으로 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순생산 및 수입세의 구성비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3 | 2023년 분배국민소득 수정전망의 구성비

(단위: %, %p)

	중기전망(22.10월)	수정전망(23.3월)	차이
피용자보수	49.6	49.7	0.1
영업잉여	19.6	19.5	-0.1
고정자본소모	20.5	21.2	0.7
순생산 및 수입세	10.3	9.6	-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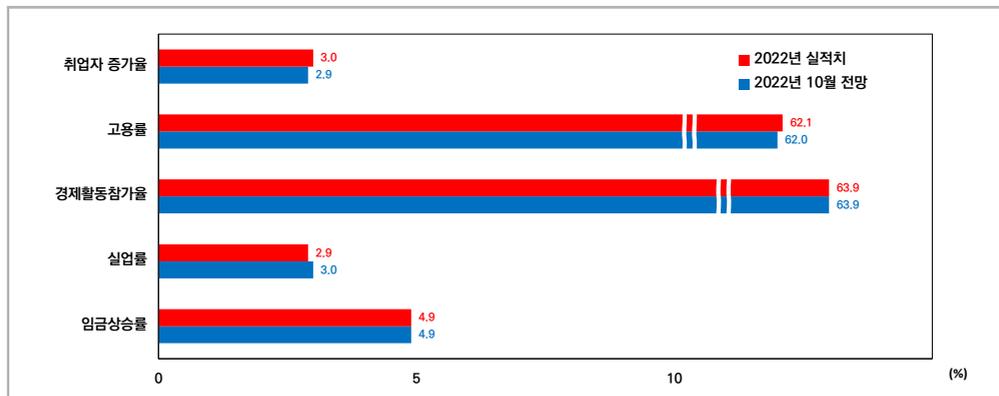
제2절 고용

1. 2022년 전망 차이 및 요인

2022년 취업자 수는 3.0%(81.6만명) 증가하였으나, NABO 중기전망¹⁵⁾의 전망치는 2.9%(79.5만명)였다는 점에서, 약 0.1%p(2.1만명)의 차이가 있다.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로 고용률은 전망치(62.0%) 대비 0.1%p 높은 62.1%, 실업률은 전망치(3.0%) 대비 0.1%p 낮은 2.9%를 기록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의 실적치가 나타났고, 임금상승률 또한 전망치와 실적치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전망과 실적치 간 차이의 요인을 살펴보면, 2022년 4/4분기의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었다. 엔데믹 전환 이후에도 요양·돌봄 등에 대한 노동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업의 취업자 수는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또한, 2022년 하반기 일부 업종에서 발생한 구인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한 것도 예상보다 느렸던 증가세 둔화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림 II-3 | 2022년 전망과 실적치 간 차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고용노동부

15)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2022.10월 발간) 기준

2. 2023년 수정 전망 요인

2023년 취업자 수 증가율 수정 전망(0.5%)은 NABO 중기전망¹⁶⁾(0.3%) 대비 0.2%p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취업자 수 전망치 조정을 반영하여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이 함께 조정되었다.

중기전망 대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어 취업자 수 조정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조정에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요인들이 존재한다. 최근 발표된 외국인력 도입 확대 및 업종 제한 완화 등은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3년 확정 예산의 직접일자리 인원은 9월 제출된 예산안 대비 약 8.9만명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전망치 수정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보건·복지업에서 지속되고 있는 요양·돌봄 서비스 수요의 증가 또한 수정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난 전망에서는 엔데믹 전환 이후 보건·복지업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어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중국의 봉쇄 해제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해외 관광객 유입 증가 또한 전망치 조정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23년 임금상승률 수정 전망(3.5%)은 중기전망(3.9%) 대비 0.4%p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지난 전망 대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6%p 하향 조정되었고, 임금근로자 중 임금 수준이 낮은 외국인력과 저임금 서비스업 종사자 증가로 인한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 등을 반영한 것이다.

표 II-4 | 2023년 고용 수정전망

(단위: %, %p)

	중기전망(22.10월)	수정전망(23.3월)	차이
취업자 수 증감률	0.3	0.5	0.2
고용률	62.0	62.1	0.1
경제활동참가율	64.1	64.2	0.1
실업률	3.4	3.3	-0.1
임금상승률	3.9	3.5	-0.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6)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2022.10월 발간) 기준

제2장 / 피용자보수

- **2023년 피용자보수**는 전년대비 4.5% 증가 전망

- 2022년 6.9%의 높은 증가세가 전망되는 반면, 2023년 4.5%로 증가세 축소 전망
- 명목GDP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49.7%로 전년대비 0.4%p 상승할 것으로 전망

(전년대비, %)

	2021	2022 ^f	2023 ^f
피용자보수 증가율	6.1	6.9	4.5
명목GDP 대비 비중	47.9	49.3	49.7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 비중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 둔화 • 임금상승률 축소

피용자보수는 임금근로자 수와 임금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피용자보수는 전체 임금근로자 수와 그들이 받는 임금의 곱으로 표현되며, 결과적으로 피용자보수의 증가율은 임금근로자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아래의 그림에 제시하였다. 다만, 데이터의 한계로 이렇게 추정된 피용자보수 증가율이 국민계정에 제시된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통해 피용자보수 증가율을 전망하였다.¹⁷⁾

2023년 중 피용자보수는 전년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1년 및 2022년의 증가율인 6.1%, 6.9%를 밑도는 수치이다.

유근식 경제분석관(gsyoo@assembly.go.kr, 6788-4753)

17) 국민계정에 제시된 피용자보수 증가율과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 증가율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BOX 1]에 보다 상세히 정리하였다.

그림 II-4 | 피용자보수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¹⁸⁾



경기둔화로 인한 취업자 증가율 및 임금상승률의 하락은 피용자보수 증가율의 하락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자 수는 2022년 3.0% 증가한 반면, 2023년에는 경기둔화와 2022년의 고용 호황의 기저효과 등으로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지속 상승하여 2023년 임금근로자 증가율은 취업자 증가율 대비 높은 0.9%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3년 임금은 경기둔화와 노동시장의 팍팍함(tightness) 완화, 저임금근로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의 상승이 전망된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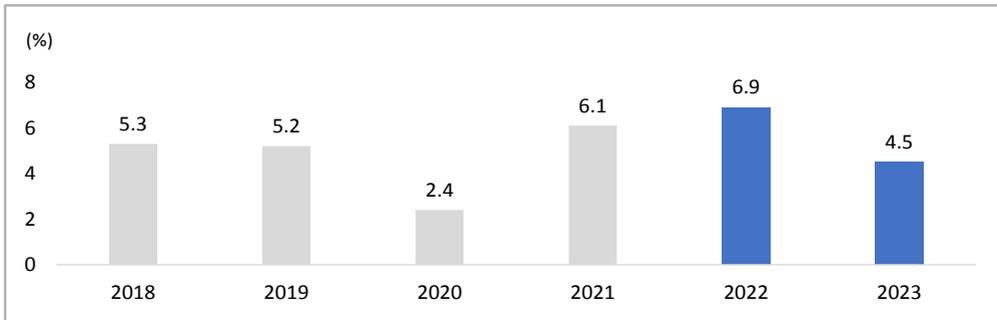
표 II-5 | 임금근로자 수 및 임금상승률 전망

(단위: %)

	2021	2022	2023 ^f
임금근로자 증가율	2.1	3.6	0.9
임금상승률	4.6	4.9	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5 | 피용자보수 증가율 전망



주: 2022년 수치는 추정치이며, 2023년 수치는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8) 임금과 임금근로자 수의 곱을 더하기 관계로 변환하는 방법은 [BOX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 2023년 취업자 수 및 임금근로자 비중, 임금상승률 전망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II부 6장 고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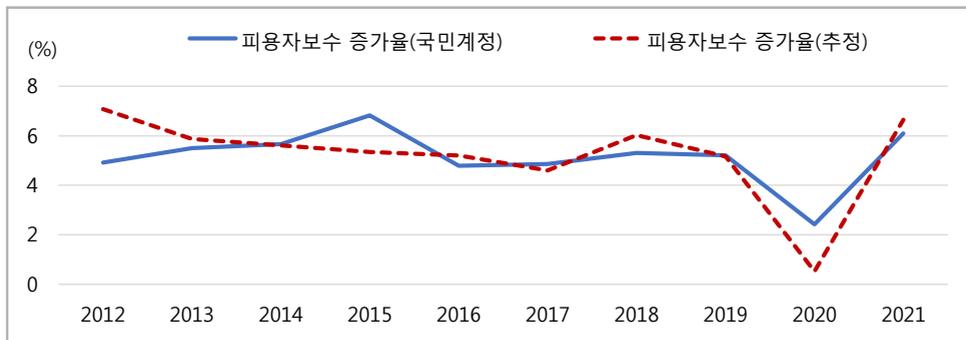
[BOX 1] 피용자보수 증가율 실측치와 추정치 간 차이의 원인

피용자보수는 한 국가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노동을 대가로 분배되는 몫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임금근로자 수와 임금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수학적 변환을 통해 피용자보수의 증가율을 임금근로자 증가율 및 임금상승률의 함수로 변환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피용자보수} &= \text{임금근로자 수} \times \text{임금} \\ \Rightarrow \ln(\text{피용자보수}) &= \ln(\text{임금근로자 수}) + \ln(\text{임금}) \\ \Rightarrow \Delta \ln(\text{피용자보수}) &= \Delta \ln(\text{임금근로자 수}) + \Delta \ln(\text{임금}) \\ \Rightarrow \text{피용자보수 증가율} &= \text{임금근로자 증가율} + \text{임금상승률} \end{aligned}$$

위의 수식에서 \ln 은 자연로그 변환을 의미하며, 로그 변환한 수치의 차분값은 변화율로 해석하였다. 위의 수식에 따르면,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임금근로자 증가율 및 임금상승률의 합과 동일해야 하지만,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이 두 변수를 통해 추정된 값과 차이가 있다.

그림 II-6 | 국민계정 피용자보수 증가율과 추정치 비교



주: 파란 실선은 국민계정에 제시된 피용자보수 변화율이며, 빨간 점선은 임금근로자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을 통해 추정한 피용자보수 변화율 추정치를 나타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이러한 차이는 가용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의 임금근로자 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기반하며, 임금은 고용노동부

의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활용한다.²⁰⁾ 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가구 측면의 조사인 반면,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사업체 측면의 조사라는 점에서 조사대상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데이터가 포착하는 임금근로자의 수에 차이가 발생한다.

표 II-6 |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임금근로자 수

(단위: 만명, %)

	경제활동인구조사(A)	사업체노동력조사(B)	(B/A)*100
2017년	1993.4	1761.7	88.4
2018년	2008.4	1814.9	90.4
2019년	2044.0	1869.9	91.5
2020년	2033.2	1840.9	90.5
2021년	2075.3	1840.3	88.7
2022년	2150.2	1886.2	87.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 수는 사업체 측면 조사인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종사자 수 대비 많다. 2022년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총 종사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 수 대비 87.7% 수준에 그친다. 이러한 차이는 사업체 측면에서는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지 않지만, 노동자 개인은 임금근로자라고 여기는 비공식 노동자 등이 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포착되는 반면, 사업체노동력조사에는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는 임금 외에도 임금근로자들이 받는 주거 서비스, 건강·보건비용, 보육지원금 등 복지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임금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 간접노동비용의 상승으로 복지 비용 등의 영향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여, 임금근로자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을 통해 추정한 피용자보수 증가율에 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임금근로자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을 독립변수로 이용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피용자보수 증가율 기본 전망치를 도출한 후 정성적 보정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망 방법론을 개선하였다.

20)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우리나라의 고용지표 및 임금에 대한 대표적인 조사이다.

- 2023년 영업잉여는 전년(-3.3% 추정)보다 6.8%p 높은 3.5% 증가할 전망
(전년대비, %)

	2021	2022 ^f	2023 ^f
영업잉여 증가율	5.3	-3.3	3.5
명목GDP 대비 비중	21.0	19.6	19.5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생산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 • 임금 상승 및 기업 수익성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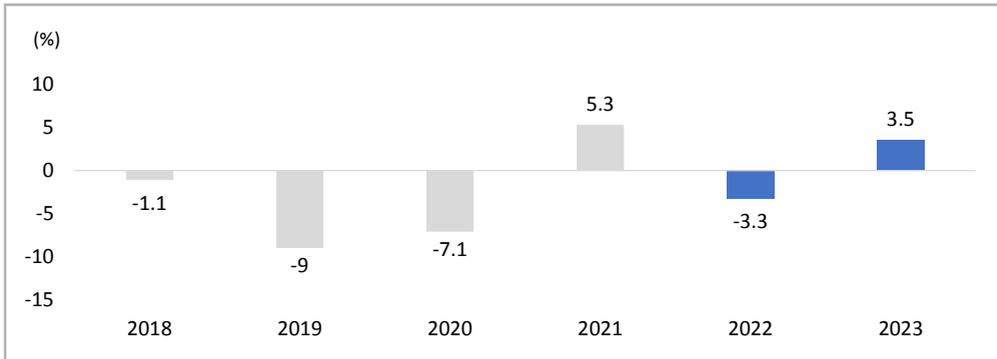
2023년 영업잉여는 전년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3년 제조업 생산이 감소(-0.5%)하지만,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2.8%)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2년의 증가율인 -3.3%보다 상승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망에 따라 영업잉여의 GDP 대비 비중은 2021년 21.0%에서 2022년과 2023년에는 19.6%, 19.5%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과 더불어 임금상승 등 기업의 수익률 하락도 영업잉여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II-7 | 영업잉여 결정요인



그림 II-8 | 영업잉여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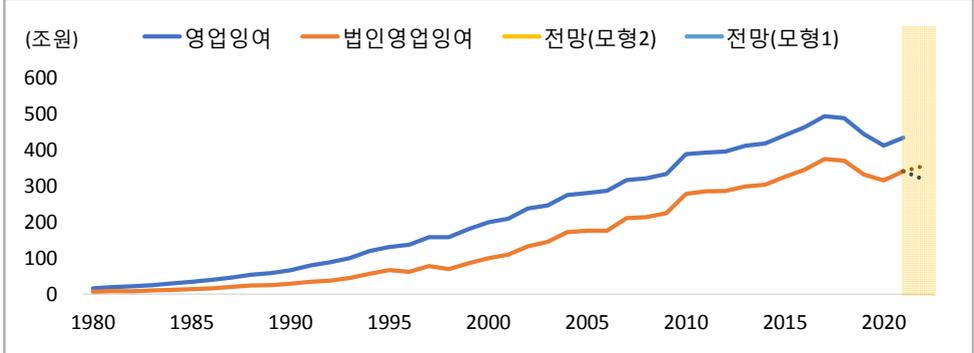
주: 2022년 수치는 추정치이며, 2023년 수치는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BOX 2] 법인영업잉여 전망

본 보고서는 국민계정과 유사하게 영업잉여를 소득발생계정의 균형항목 (balancing item)으로 활용하여 명목GDP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를 제한 값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업잉여가 공식통계로 파악하기 어려운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항목을 이용하지만, 세부 항목별 수치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영업잉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영업잉여를 별도로 전망해보았다. 법인영업잉여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유사하므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법인잉여를 전망하였다. 2022년 제조업 생산 실적(1.4%)은 전망치(2.7%)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 실적(4.2%)이 전망치(3.3%)보다 높게 나타나 이를 고려한 추정결과(모형1) 2022년 법인영업잉여는 4.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을 전망모형에 추가하여 보았다. KIS-Value²¹⁾의 2022년 1~3분기 상장기업 영업이익 총계는 전년동기 대비 -70%로 크게 감소하였고, 이를 고려한 추정결과(모형2) 2022년 영업잉여는 -6.4%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IS-Value 상장기업 영업이익을 반영한 모형은 해당 변수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변수간 정합성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9 | 법인영업잉여 추이와 모형별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1) KIS-Value는 NICE평가정보(주)에서 제공하는 국내 기업 재무제표 자료이다.

제4장 고정자본소모

- 2023년 고정자본소모는 전년(5.9% 추정)보다 2.7%p 낮은 3.2% 증가할 전망
(전년대비, %)

	2021	2022 ^f	2023 ^f
고정자본소모 증가율	8.2	5.9	3.2
명목GDP 대비 비중	20.9	21.3	21.2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감소 • 실질 국내총생산의 성장 둔화

고정자본소모는 실질 가치로 고정자본소모를 추정한 뒤, 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명목가치로 전망하였다. 실질 고정자본소모는 자본축적 방정식을 통하여 계산하였는데, 자본축적 방정식은 순자본스톡 중 실질 고정자산과 실질 고정자본 형성을 통하여 감가상각률을 전망할 수 있었다. 전망된 감가상각률을 이용하여 실질 고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 된 자본의 양을 실질 고정자본소모로 전망하였다. 고정자본소모에 대한 디플레이터는 총고정자본형성의 디플레이터를 결정요인으로 설정하여 전망하였다.

2023년 중 고정자본소모는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2년의 5.9%와 비교해서 2.7%p 감소한 수치이다. 2023년에는 총고정자본형성의 증가율이 0.2%대로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질 고정자본소모는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정자본소모에 대한 디플레이터가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명목 고정자본소모는 3.2%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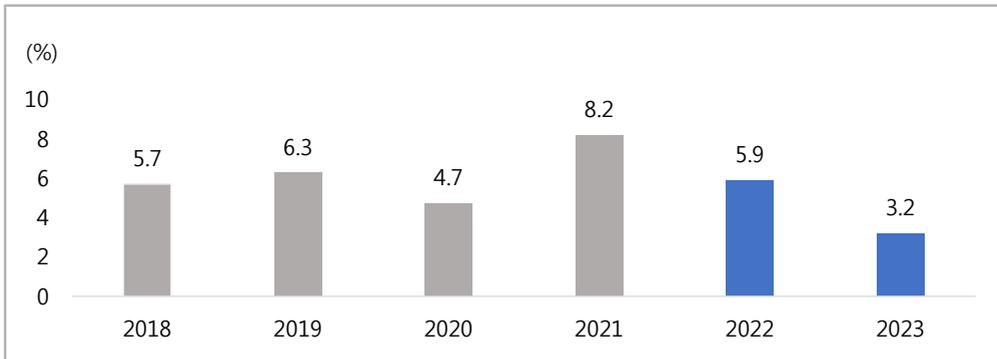
김상용 경제분석관(sangyong@assembly.go.kr, 6788-4680)

Ⅰ 그림 Ⅱ-10 | 고정자본소모와 주요 결정요인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Ⅰ 그림 Ⅱ-11 | 고정자본소모 증가율 전망



주 : 2022년 수치는 추정치이며, 2023년 수치는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5장 순생산 및 수입세

- 2023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전년(-0.4% 추정)보다 1.7%p 높은 1.3% 증가할 전망
(전년대비, %)

	2021	2022 ^f	2023 ^f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	10.0	-0.4	1.3
명목GDP 대비 비중	10.2	9.8	9.6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세 환급액 증가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률 하락 • 수입 둔화로 인한 수입세 증가 둔화

순생산 및 수입세는 명목GDP 성장률과 수입액, 수출액, 순생산물세를 주요 결정 요인으로 선정하여 전망하였다. 생산세는 생산·판매 등에 기반하여 단위당 부과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받으며 수입세는 수입액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에 활용된 수입 원재료는 기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수출액을 통해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였다. 순생산 및 수입세와 주요 결정요인 간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중 순생산 및 수입세는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2년 증가율인 -0.4%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2023년에는 명목GDP가 증가(3.7%)하나 실질순생산물세(-1.3%)와 디플레이터(2.2%) 전망을 고려하면, 순생산 및 수입세는 약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전망으로 명목GDP대비 순생산 및 수입세의 비중은 2023년 9.6%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삼미 경제분석관(sangmi@assembly.go.kr, 6788-4752)

그림 II-12 | 순생산 및 수입세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년의 법인세(47.1%)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15.1% 증가하였다. 하지만 국세 중에서 생산 및 수입세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관세 등의 세금은 전년대비 3.0% 증가하는데 그쳤다. 2022년 지방세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순생산 및 수입세에 포함되는 지방세인 취득세는 작년 주택거래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22년의 순생산 및 수입세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7 | 국세 및 지방세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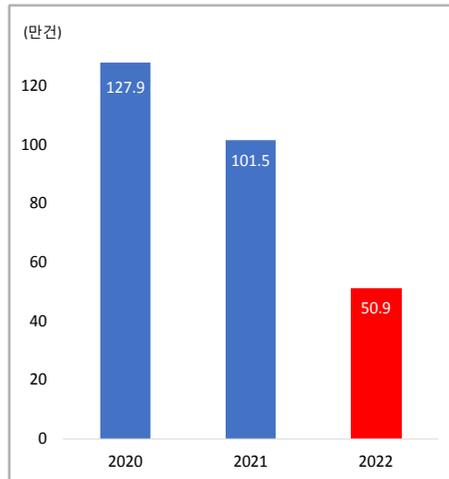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21	2022	증가율
국세수입	344.1	395.9	15.1
• 생산 및 수입세	144.6	149.0	3.0
- 부가가치세	71.2	81.6	14.6
- 교통세	16.6	11.1	-33.0
- 관세	8.2	10.3	25.5
- 기타	48.6	45.9	-5.4
• 경상세			
- 소득세	114.1	128.7	12.8
- 법인세	70.4	103.6	47.1
- 상속증여세	15.0	14.6	-2.7
지방세수입	112.8		
취득세	33.7		
지방소비세	17.8		
기타	61.3		

주: 1) 국세는 2022회계연도 총세입 마감결과 보도자료 수치임
 2) 지방세는 2021년 자료로 2022년도 수치가 발표전임
 3) 기타에는 경상세의 일부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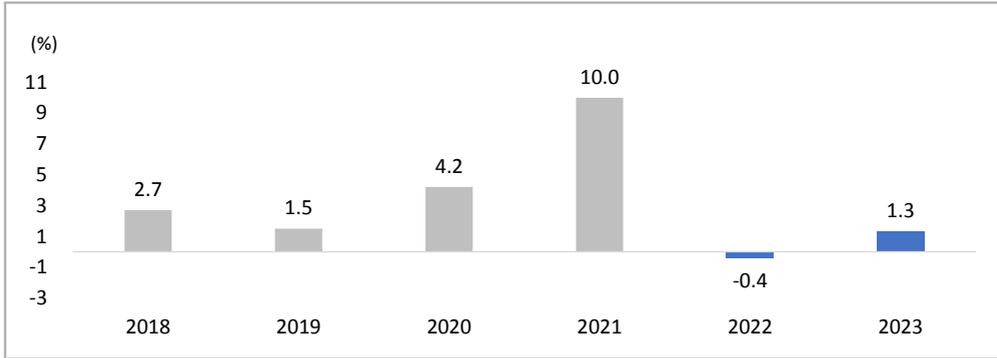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그림 II-13 | 주택매매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Ⅱ-14 |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 전망



주: 2022년 수치는 추정치이며, 2023년 수치는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1절 주요 고용지표 전망²²⁾

- 2023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4.7만명(0.5%) 증가 전망
 -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81.6만명 증가)의 약 18.1% 수준으로 축소
- 2023년 고용률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62.1%로 전망
- 2023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63.9%) 대비 0.3%p 상승한 64.2%로 전망
- 2023년 실업률은 전년(2.9%) 대비 0.4%p 상승한 3.3%로 전망

(전년대비, 만명,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f	하반기 ^f	연간 ^f
취업자 수 증감 (증감률)	36.9 (1.4)	94.1 (3.5)	69.2 (2.5)	81.6 (3.0)	18.9 (0.7)	10.6 (0.4)	14.7 (0.5)
고용률	60.5	61.6	62.5	62.1	61.8	62.4	62.1
경제활동참가율	62.8	63.7	64.1	63.9	64.1	64.4	64.2
실업률	3.7	3.2	2.5	2.9	3.5	3.2	3.3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외국인 인력 도입 확대 및 유연화	• 경제성장률 둔화
• 해외 관광객 유입 증가	• 소비심리 위축
• 요양·돌봄 서비스 관련 노동수요 증가	• 지난해 고용 호황의 기저효과

유근식 경제분석관(gsyoo@assembly.go.kr, 6788-4753)

22) 주요 고용지표로 취업자 수와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을 제시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비중을 의미하며,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의 비중을 나타낸다. 실업률은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의 비중을 의미한다.

1. 2022년 하반기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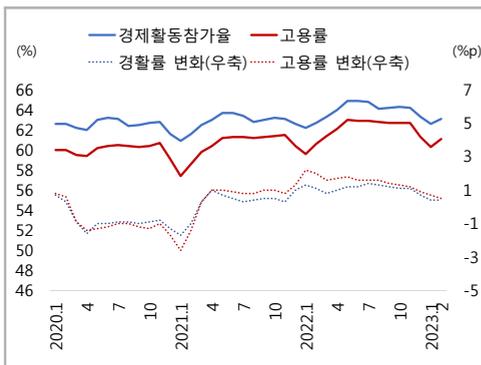
2022년 취업자 수는 상반기에 큰 폭(94.1만명)으로 증가한 후, 하반기에도 69.2만명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다만, 하반기 중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2년 7월 82.6만명에서 12월에는 50.9만명으로 지속 축소되었으며, 2023년 2월 까지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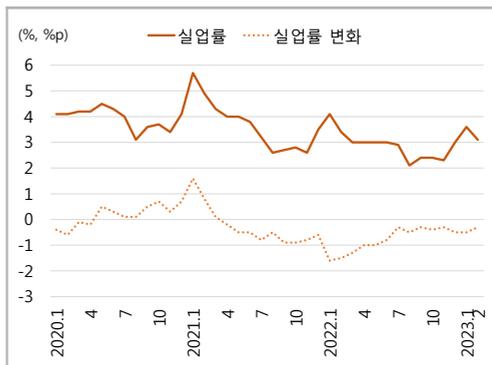
2022년 하반기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1.1%p 상승한 62.5%를 기록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1.1%p 상승한 64.1%를 기록하였다. 취업자 증가세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보다 높아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2.5%를 기록하였다. 다만,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22년 중반 이후 상승폭이 지속 축소되었고, 이러한 둔화세는 2023년 2월까지 지속되고 있다.

| 그림 II-16 |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변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II-17 | 실업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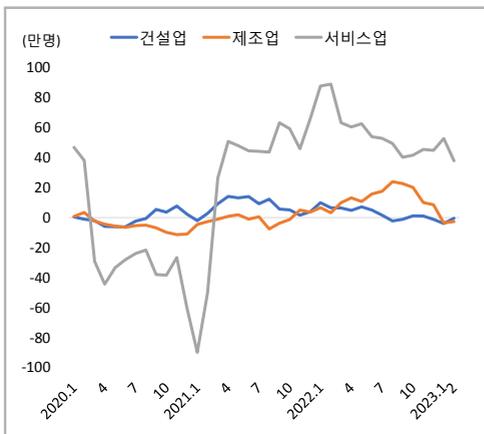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수 변화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2022년 하반기 동안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45.6만명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하였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17.2만명 증가한 반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0.1만명 감소하였다.

2022년 상반기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성장한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운수·창고,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과 공공 비중이 높은 업종(공공·행정, 보건·복지)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하반기에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의 증가세는 위축되었지만, 공공·행정 및 보건·복지 서비스업 등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면서비스업(숙박·음식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개인)의 노동수요가 확대되며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의 노동수요는 하반기 중 빠르게 둔화되었고 특히, 택배 및 배달업 종사자를 포괄하고 있는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부터 감소 전환하였다. 2023년 2월 기준, 서비스업은 숙박·음식점업과 보건·복지업 등을 중심으로 높은 취업자 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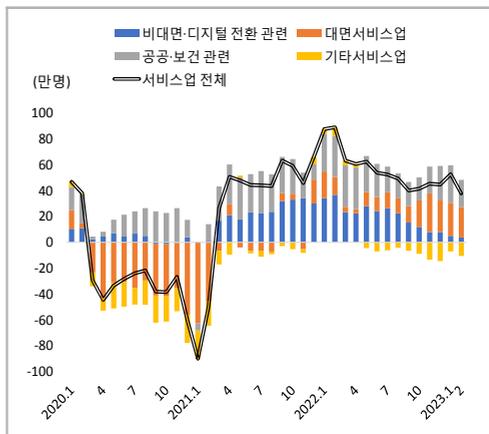
하반기 제조업 취업자 수 또한 수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였지만, 증가세는 2022년 8월 정점 이후 증가폭이 점차 축소되었고, 2023년 1월에 감소 전환하였다. 하반기 중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와 감소를 오갔으나 12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 그림 II-18 |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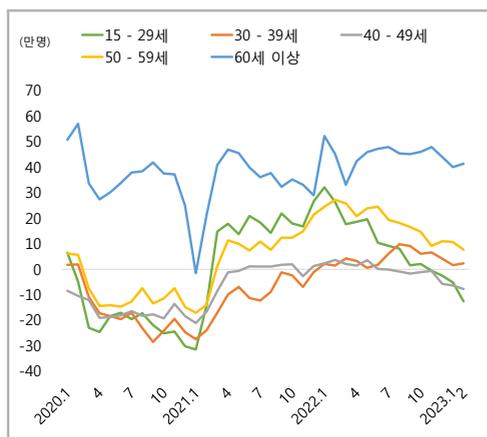
| 그림 II-19 | 서비스업 특성별 취업자 수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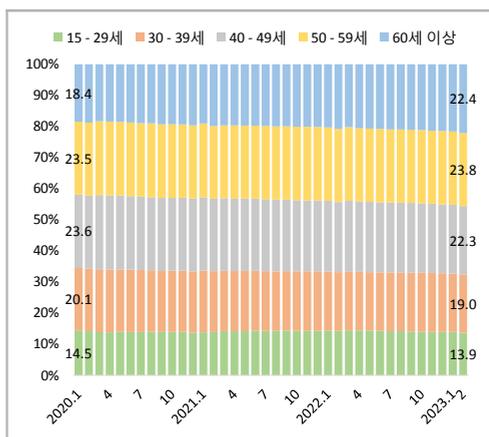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15~29세 취업자 수는, 2022년 상반기 20.8만명 증가하여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2022년 하반기에는 증가폭이 축소되어 3.0만명 증가에 그쳤고, 특히 11월 감소 전환 이후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30대와 40대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30대는 하반기에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40대는 감소 전환하였다. 50대 취업자 수는 하반기에도 14.9만명 증가하여 고령층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고령층은 2022년 하반기에도 46.1만명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최근의 급격한 고령 취업자 수 증가로 인해 2020년 1월 18.4%였던 고령 취업자 비중은 2023년 2월 22.4%로 4.0%p 상승하였다. 지난 5년간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세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최근 증가세가 둔화²³⁾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그림 II-20 |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II-21 | 연령별 취업자 수(계절조정)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년 하반기 취업자 수는 남성(30.5만명)과 여성(38.8만명)에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취업자 수 증가세는 모든 성별에서 상반기 대비 둔화되었다. 2020년 코로나19의 고용충격으로 여성 취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큰 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2021년부터 남성 대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23) 노인일자리 수는 2017년 약 49.6만개에서 2021년 83.6만개로 연평균 8.5만개씩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전년대비 0.9만개, 2023년 3.8만개 증가하는 등 최근 증가세가 축소되었다.

표 II-8 | 성별 취업자 수 증감

(전년대비, 만명)

성별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남성	-8.2	16.6	45.7	30.5
여성	-13.7	20.2	48.3	38.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BOX 3] 성별·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 분해

다음은 성별·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를 인구 수와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변화의 영향으로 분해하여 각 항목이 취업자 수 증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정 연령집단의 취업자 수 변화는 인구 수 변화, 경제활동 참여 성향,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등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취업자 수 변화를 아래의 수식을 통해 인구 수와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변화의 영향으로 분해하여 각 부문별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²⁴⁾

$$\text{취업자 수} = \text{인구 수} \times \text{경제활동참가율} \times (1 - \text{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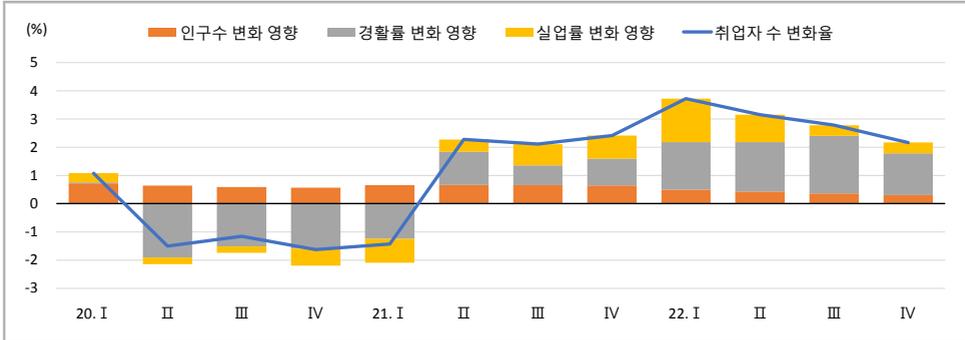
$$\Rightarrow \ln(\text{취업자수}) = \ln(\text{인구수}) + \ln(\text{경제활동참가율}) + \ln(1 - \text{실업률})$$

$$\Rightarrow \Delta \ln(\text{취업자수}) = \Delta \ln(\text{인구수}) + \Delta \ln(\text{경제활동참가율}) + \Delta \ln(1 - \text{실업률})$$

위의 수식에서 인구 수는 노동을 공급할 수 있는 집단의 규모를 나타낸다. 경제활동참가율은 해당 집단의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비중을 의미하여 경제활동 참여 성향의 척도가 되며, 실업률은 경제활동 의사가 있으나 일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중을 나타내며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척도가 된다.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 변화를 분해한 결과, 인구 수는 증가세를 지속하여 취업자 수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2021년 2분기 이후 취업자 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실업률의 긍정적 영향은 2022년 1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축소되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의 영향 또한 2022년 4분기에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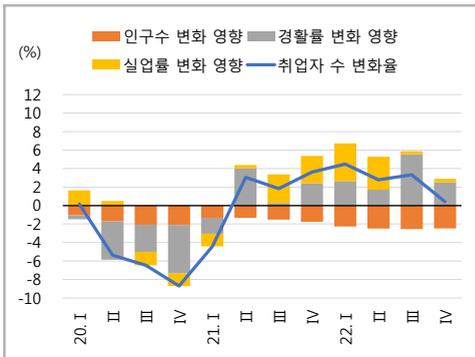
그림 II-22 | 취업자 수 변화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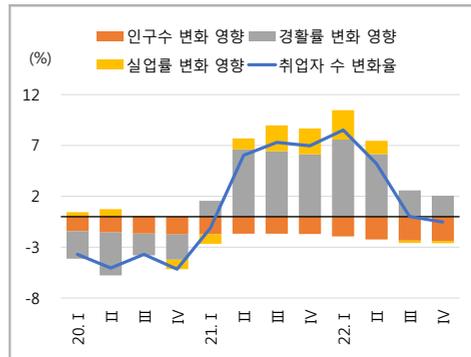
주: 자연로그의 차분값을 변화율로 해석하였음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5~29세의 경우, 인구 수 감소는 해당 연령층의 취업자 수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2021년부터 취업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22년 상반기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취업자 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2022년 하반기부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기여도는 축소되었다. 실업률은 2021년 2분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15~29세 취업자 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2022년 하반기부터, 실업률이 남성 취업자 수에 미치던 긍정적 영향은 큰 폭 감소하였고, 여성 취업자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II-23 | 15~29세 취업자 수 변화 분해
 (남성)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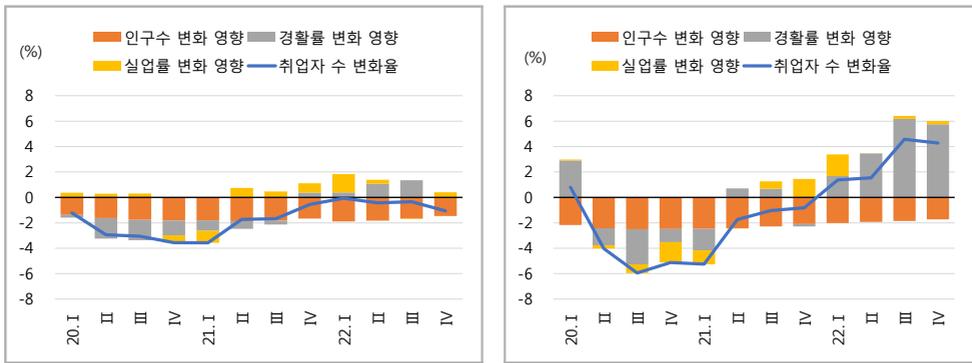
주: 자연로그의 차분값을 변화율로 해석하였음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 자연로그의 차분값을 변화율로 해석하였음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0대 또한 인구 수 감소가 취업자 수 변화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은 2021년 하반기부터 30대 남성 및 여성 취업자 수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남성의 경우 그 긍정적 영향이 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보다 작아 취업자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반면, 30대 여성의 경우 2022년부터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취업자 수 증가 전환 및 증가 폭 확대에 기여하였다.

그림 II-24 | 30대 취업자 수 변화 분해
(남성)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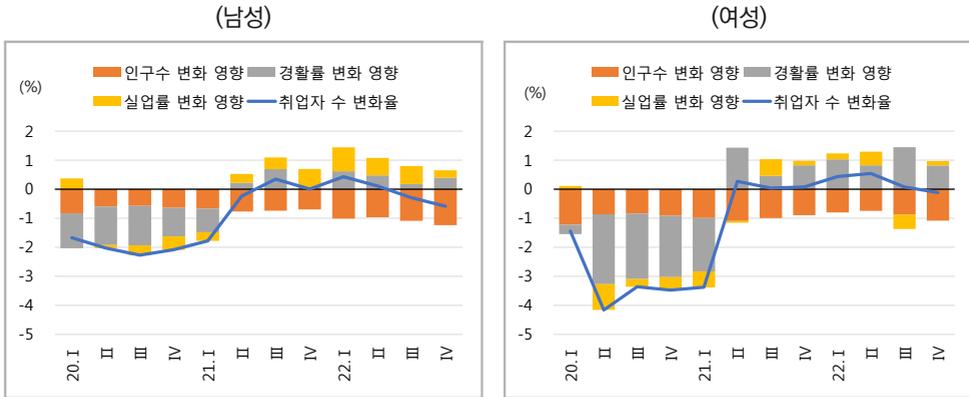
주: 자연로그의 차분값을 변화율로 해석하였음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 자연로그의 차분값을 변화율로 해석하였음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0대 또한 인구 수가 감소하여 취업자 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남성은 실업률,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 변화가 2021년 이후 취업자 수 변화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0대 취업자 수는 2021년 중반부터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의 긍정적 영향이 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능가하여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감소 전환하였다. 40대 취업자 수 변화에서 남성은 실업률 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은 반면,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의 영향이 커서 성별에 따라 항목별 기여도가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24) ln은 자연로그 변환을 나타내며 자연로그의 차분값($\Delta \ln$)은 변화율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25 | 40대 취업자 수 변화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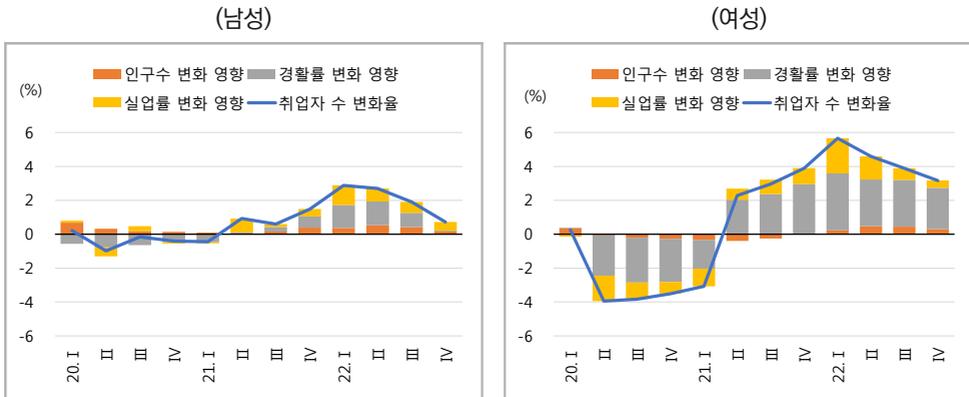


주: 자연로그의 차분값을 변화율로 해석하였음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 자연로그의 차분값을 변화율로 해석하였음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0대 취업자 수 변화는 인구 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모습이다. 50대 남성 인구 수는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여성 인구 수는 2020년 이후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2년 증가 전환하였다. 50대 취업자 수는 2021년 2분기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해당 항목들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쳐 여성 취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그림 II-26 | 50대 취업자 수 변화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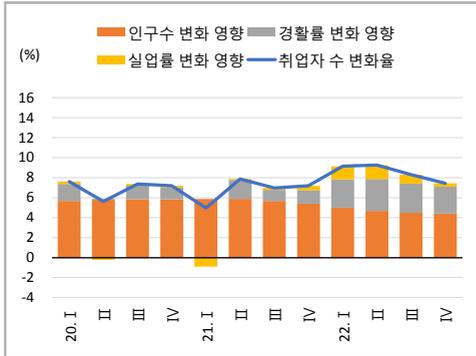


주: 자연로그의 차분값을 변화율로 해석하였음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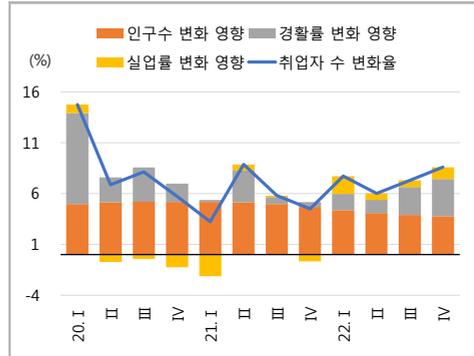
주: 자연로그의 차분값을 변화율로 해석하였음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고령층(60대)은 인구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 상승하여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2020년 및 2021년 일부 시기에 고령층 취업자 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2022년 이후 긍정적 영향을 지속하였다.

| 그림 II-27 | 고령층 취업자 수 변화 분해
(남성) (여성)



주: 자연로그의 차분값을 변화율로 해석하였음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 자연로그의 차분값을 변화율로 해석하였음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상을 바탕으로 요약하면, 40대 이하는 인구 감소가 취업자 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고령층 인구 증가는 취업자 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변화는 코로나19 이후 취업자 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취업자 수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2년 하반기부터 30대 여성과 고령층 여성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연령 집단에서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변화의 긍정적 영향이 축소되고 있다.

충족되지 않은 노동수요를 의미하는 빈일자리는 2022년 상반기 21.4만건으로 2018년 상반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2022년 하반기도 21.2만건의 높은 수준의 빈일자리가 존재하였다. 전반적으로 2022년 기간 동안 노동시장은 높은 노동수요와 더불어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채워지지 않은 수요가 많은 딱딱(tight)한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빈일자리 수는 2022년 6월에 22.7만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추세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1월 17.9만건을 기록하는 등 하반기 동안 노동시장의 딱딱함이 완화되었다. 전체일자리 중 채워지지 않은 비율을 나타내는 빈일자리율은 상반기 1.20%, 하반기 1.17%를 기록하였고 2023년 1월에는 0.99%로 하락하였다.

그림 II-28 | 빈일자리 변화



주: 1. 빈 일자리는 조사 기준월의 마지막 영업일에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에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를 의미
 2. 빈일자리율은 전체일자리(종사자수+빈일자리) 중 빈일자리 비율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 2023년 고용 전망

2023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4.7만명(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2년의 취업자 수 증가폭인 81.6만명(3.0%)의 약 18.1% 수준이다. 고용률은 62.1%로 전년과 동일한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이 64.2%로 0.3%p 상승하여 실업률은 전년대비 0.4%p 상승한 3.3%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상황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취업자 수는 상반기 18.9만명 하반기에는 10.6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모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경제상황 변화와 고용의 계절적 특성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표 II-9 | 2023년 고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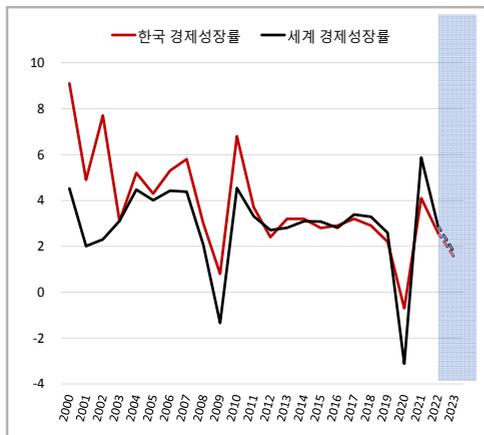
(전년대비, 만명,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f	하반기 ^f	연간 ^f
취업자 수 증감 (증감률)	36.9 (1.4)	94.1 (3.5)	69.2 (2.5)	81.6 (3.0)	18.9 (0.7)	10.6 (0.4)	14.7 (0.5)
고용률	60.5	61.6	62.5	62.1	61.8	62.4	62.1
경제활동참가율	62.8	63.7	64.1	63.9	64.1	64.4	64.2
실업률	3.7	3.2	2.5	2.9	3.5	3.2	3.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2023년의 고용 증가세 둔화는 경제성장 둔화에 주로 기인한다.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국제 교역 위축에 따른 수출 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2023년 우리경제는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2.6%) 대비 약 1.1%p 낮은 수준으로, 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노동수요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년은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GDP와 취업자 수 간 장기균형을 벗어나는 높은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나타났으며, 2022년의 기저효과는 2023년 고용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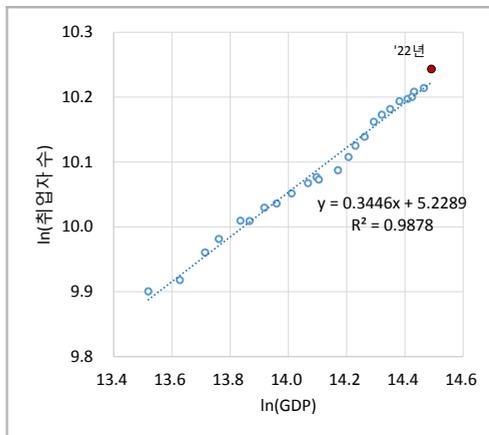
그림 II-29 | 세계 및 한국 경제성장률



주: 2023년 값은 국회예산정책처(한국) 및 World Bank (세계)의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World Bank

그림 II-30 | GDP와 취업자 수 간 관계 (1998~2022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2022년 10월에 발표된 NABO 중기 경제전망에서 2023년 고용을 전망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전망 이후의 상황 및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망치를 수정하였고, 이에 기존 전망치와 이번 수정전망치의 차이를 아래의 표에 제시하였다.

표 II-10 | 2023년 고용 전망 수치 변화(NABO 중기전망 대비)

(단위: 만명, %, %p)

	취업자 수 증감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2022년 10월	8.6	61.9	64.1	3.4
2023년 3월	14.7	62.1	64.2	3.3
차이	6.1	0.2	0.1	-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지난해 전망 대비 6.1만명 확대되었다. 우리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전망 대비 하향 조정되어 수정 고용전망의 주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전망치 수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방 요인들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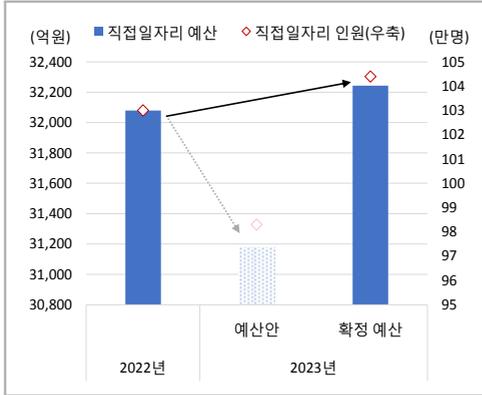
우선, 정부 정책 측면의 변화는 전망치 수정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난해 9월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은 직접일자리 인원을 전년대비 7.5만명 축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전년대비 1.4만명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수정 및 확정되었다.²⁵⁾ 이러한 직접일자리 인원 변화를 반영하여 취업자 수 및 경제활동인구 전망치를 조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최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간 약 5~6만명 수준이었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쿼터(E-9비자)를 2023년 11만명으로 확대²⁶⁾하였고, 입국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수는 약 5~6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근로자 확대는 인구와 취업자 수, 경제활동인구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비자)과 방문취업동포(H-2비자) 업종 제한이 완화되어 노동수요-공급 간 미스매치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²⁷⁾

2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년 일자리 예산 30.3조원」, 2023.1.2.

26) 2022.10.25. 제3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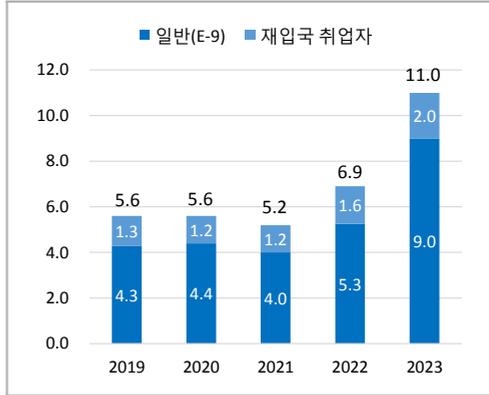
27) 2023년 1월 1일부터 서비스업·광업의 방문취업동포(H-2) 고용 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허용업종 지정(포지티브)방식에서 허용제외업종 지정(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2021.12.28.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되었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의 서비스업 허용업종을 확대하여 일부 상·하차 직종에 대한 고용을 허용하였다(2023.1.3.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

그림 II-31 | 직접일자리 예산 및 인원 변화



자료: 고용노동부

그림 II-32 | 외국인 근로자 쿼터 변화



주: 2022년의 경우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상향 조정한 쿼터를 반영하였음

자료: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www.ep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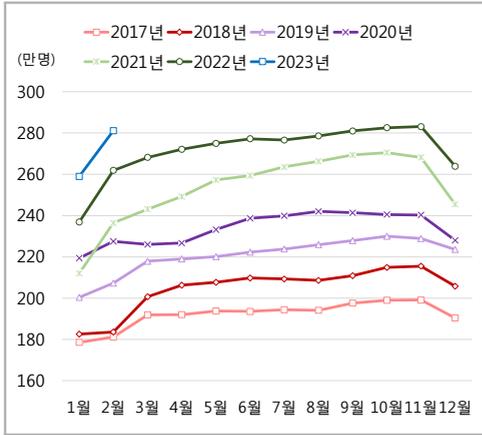
또한, 중국의 봉쇄 해제 등으로 인한 해외 관광객의 국내 유입은 일부 서비스업 업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산업의 노동수요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소매, 숙박·음식점, 육상운송서비스 등 관광객 증가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취업유발계수²⁸⁾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이라는 점에서, 성장률 감소로 인한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를 일부 완화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속되고 있는 보건·복지업의 취업자 수 증가세 또한 전망치 수정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존 전망에서는 엔데믹 전환으로 보건·복지업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2023년 2월까지도 보건·복지업 취업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요양 시설이나 재가 돌봄 등 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축소²⁹⁾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서비스 이용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22년 중 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한 노동수요가 점차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는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확대되는 요양·돌봄 분야의 노동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 취업유발계수는 특정산업부문에 대한 최종 수요가 증가할 때 해당 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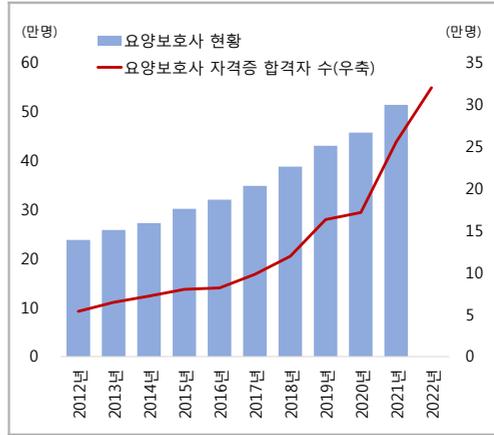
29) 2017~2019년 사이 약 1.8조의 적자를 기록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코로나19 이후 요양 서비스 이용이 감소하면서 2020~2021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림 II-33 | 보건복지업 취업자 수 변화



자료: 통계청

그림 II-34 | 요양보호사 변화



자료: 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직업인국가시험원

제2절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중 전망

- 2023년 임금근로자 비중은 전년대비 0.4%p 상승한 76.9%로 전망
- 2023년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전년대비 0.4%p 하락한 23.1%로 전망
 - 자영업자 비중은 19.8%로 전년대비 0.3%p 하락,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3.3%로 전년대비 0.1%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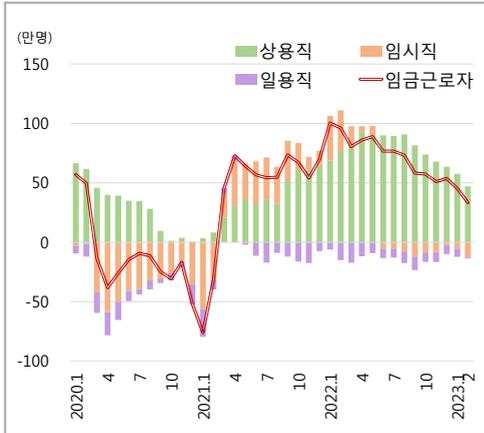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f	하반기 ^f	연간 ^f
임금근로자	76.1	76.6	76.5	76.5	76.8	76.9	76.9
비임금근로자	23.9	23.4	23.5	23.5	23.2	23.1	23.1
- 자영업자	20.2	20.0	20.1	20.1	19.8	19.9	19.8
- 무급가족종사자	3.7	3.4	3.4	3.4	3.4	3.2	3.3

2022년 하반기 임금근로자는 61.7만명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상용직이 77.8만명 증가하여 임금근로자의 증가세를 주도한 반면, 임시직 및 일용직 고용은 위축되었다.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던 일용직은 2022년 하반기에도 8.8만명 감소하였고, 2021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였던 임시직 또한 감소 전환(-7.4만명)하였다. 임시직 및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에서 고용 취약계층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의 임시·일용직 감소는 경기둔화로 인한 고용 충격이 고용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반면, 임시·일용직 감소가 상용직 증가와 함께 나타났다는 점에서 고용구조 변화로 임시·일용직이 상용직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위의 상반된 두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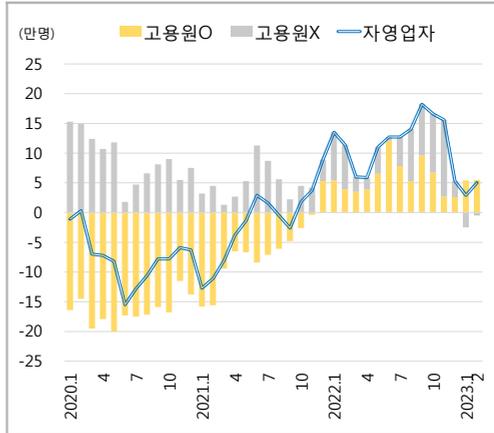
지난 하반기, 자영업자의 수는 13.7만명 증가하였다. 자영업자의 증가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5.8만명)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8.0만명)에서 모두 발생하였다. 자영업자의 증가폭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확대되었지만, 8월에 18.2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하였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12월에 5.3만명으로 축소되어 연말로 갈수록 자영업자의 증가세가 둔화하였다. 2023년 2월, 자영업자 수는 증가세 둔화가 일시적으로 반전(1월 2.9만명 → 2월 5.0만명)되었으나 2023년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증가세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그림 II-35 | 임금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II-36 | 자영업자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3년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76.9%로 지난해의 76.5% 대비 0.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동안 임시·일용직 고용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상용직의 증가세가 지속되어 임금근로자는 증가하는 반면,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소폭 감소하여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 전망되는 임금근로자 비중 상승 정도는 최근 10년의 평균적인 상승 속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임금근로자 비중은 고용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1963년 이래 추세적 상승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0년대 이후 연평균 약 0.4%p의 속도로 상승하였다.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기존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전년대비 0.3%p 하락한 19.8%, 무급가족종사자는 0.1%p 하락한 3.2%가 될 전망이다.

제3절 임금상승률 전망

- 2023년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대비 3.5% 증가 전망
 - 2023년 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1.4%p 낮은 수준

(전년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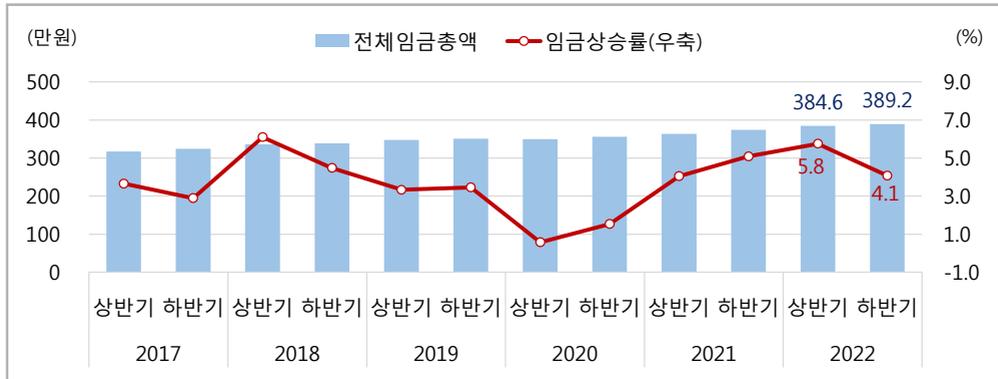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f	하반기f	연간f
임금상승률	4.6	5.8	4.1	4.9	3.4	3.5	3.5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	• 경제성장률 둔화
• 2022년 물가상승률의 사후 반영	• 노동시장의 빡빡함(tightness) 완화
	• 저임금근로자 증가

2022년 하반기 중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89.2만원으로 전년대비 15.2만 원 증가하였다. 상반기에 5.8%였던 임금상승률은, 하반기에 4.1%로 축소되며 2022년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4.9%를 기록하였다.

그림 II-37 |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수준 및 임금상승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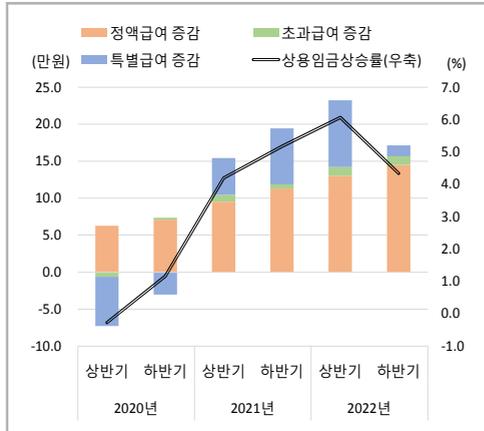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직의 임금은 상반기에 6.1%, 하반기에 4.3% 상승하여 2022년 중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이러한 상·하반기 상용직 임금상승률 변화는 주로 특별급여 변화에 기인한다. 상용직 특별급여는 2022년 상반기에 전년대비 9.0만원(19.1%) 상승한 이후 하반기 전년대비 1.5만원 상승에 그쳐 하반기 임금상승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상용직의 정액급여는 상반기 13.0만원(4.1%), 하반기 14.5만원(4.5%) 상승하여 상승폭이 지속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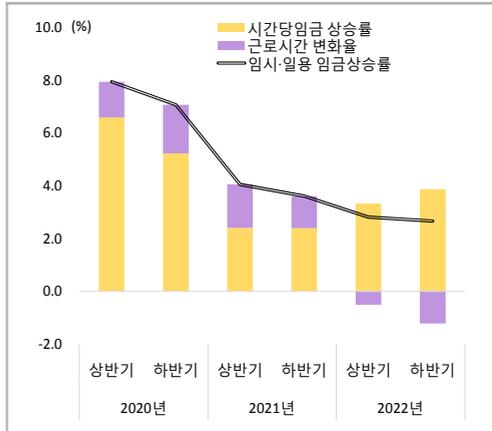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2022년 상반기 2.9%, 하반기 2.7% 상승하였다. 임시·일용직은 2022년 중 시간당임금의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축소되어 하반기에 임금상승률이 둔화되었다.

| 그림 II-38 | 상용직 임금변화 분해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 그림 II-39 | 임시·일용직 임금상승률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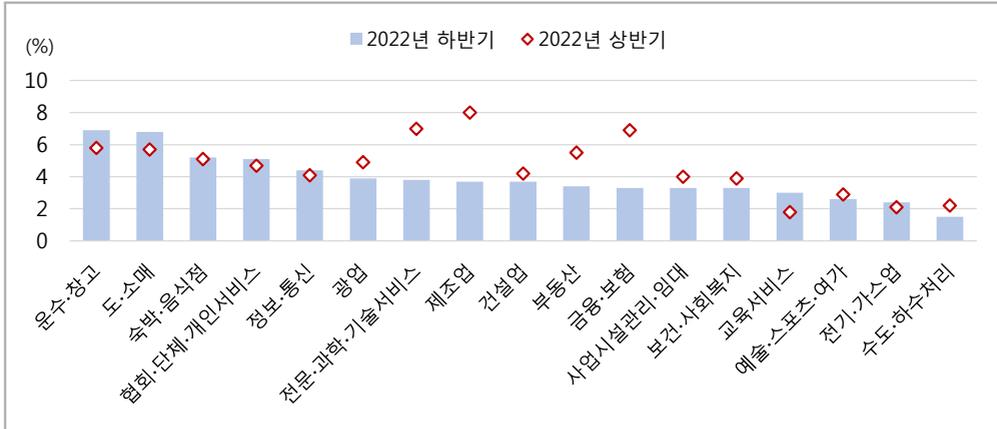


주: 자연로그 변환을 통해 임시·일용직 임금총액의 변화를 시간당임금과 근로시간 변화율로 분해하였음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산업별로 살펴보면, 2022년 하반기 운수·창고업(6.9%)과 도·소매업(6.8%)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고, 숙박·음식점업(5.2%), 협회·단체·개인 서비스업(5.1%) 등에서도 양호한 상승률이 나타났다. 반면, 상반기에 높은 수준을 상승세를 보였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상반기: 7.0%→하반기: 3.8%), 제조업(8.0%→3.7%), 금융·보험업(6.9%→3.3%)의 임금은 하반기에 상승세가 크게 위축되었다.

그림 II-40 | 2022년 상·하반기 산업별 임금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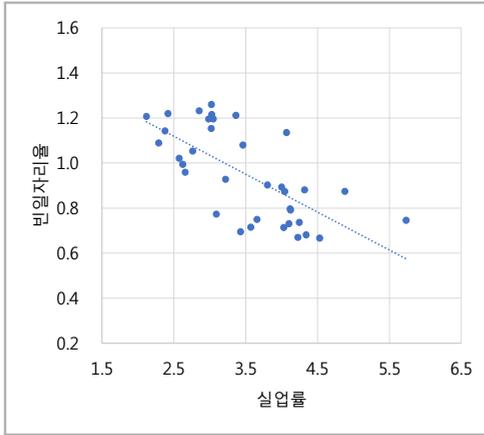
2023년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2년 임금상승률 대비 1.4%p 하락한 수치이다. 2023년 우리경제는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성장률의 둔화는 임금상승의 주요 하방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2년에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이 나타났고 2023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임금상승률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³⁰⁾ 이외에도 임금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요인들이 존재한다.

2022년 동안 노동시장은 실업률이 낮고 빈일자리는 많은 딱딱(tight)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실업률과 빈일자리율은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실업률이 하락할 때 기업이 구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증가하여 노동시장의 딱딱함이 강화되고 빈일자리율이 상승한 것이다. 2023년 실업률은 3.3%로 전년 대비 0.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딱딱함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노동시장의 딱딱함은 임금상승률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딱딱함의 완화는 임금상승률을 둔화시키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0) 물가는 시차를 두고 임금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정성 외(2022)는 물가상승률이 약 4분기의 시차를 두고 임금상승률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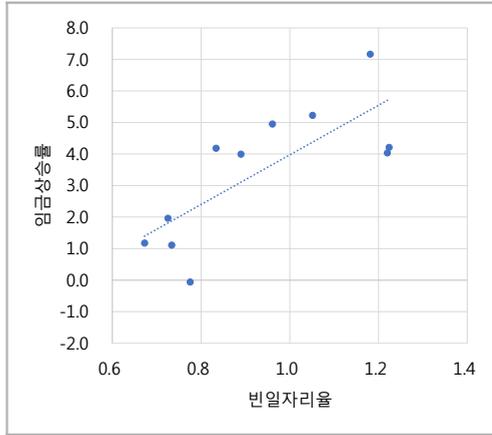
김정성·임용지·오강현·최열매·김윤경·이재진 (2022), “우리나라의 물가-임금 관계 점검”, BOK 이슈노트 제 2022-26호

그림 II-41 | 실업률과 빈일자리율



주: 2020년 이후 월별 자료 활용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그림 II-42 | 빈일자리율과 임금상승률



주: 2020년 이후 분기별 자료 활용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상승률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만한 점은 2023년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023년 취업자 수 증가에 외국인력 도입 확대가 일부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체 근로자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외국인력의 증가는 임금상승률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³¹⁾ 또한, 최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요양·돌봄 관련 서비스업과 해외 관광객 유입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 중 숙박·음식점업 등은 종사자의 임금수준이 높지 않아, 해당 부문의 취업자 증가가 평균 임금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³²⁾³³⁾

31) 2021년 기준 외국인력의 평균 월급은 266.2만원으로 2021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급여수준인 368.9만원의 72.1% 수준이다. 외국인력의 월 평균 임금은 국세통계포털에 제공되는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에서 “총지급액(비과세포함)/총인원÷12”로 도출하였고,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수치를 활용하였다.

32) 2022년 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중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지자체 운영 시설 종사 요양보호사의 2020년 12월 기준 평균 월 보수액은 211.6만원으로 동 시점 총산업 평균임금인 400.4만원(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의 약 52.8% 수준이다.
경승구·박세영·이호용·신예린 (2021),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변화 탐색 연구”, 건강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1-0019

33) 2022년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월평균 임금은 200.3만원으로, 전체 산업 중 가장 낮으며, 전산업 월평균 임금인 386.9만원의 51.8% 수준이다.

제4절 고용 관련 정책 검토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변화

2023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은 2022년 대비 1조 2,327억원(3.9%) 감소한 30조 3,481억원이다. 기존 정부의 2023년 일자리 예산안은 30조 2,655억원이었지만,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827억원 증액되었다. 유형별로는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창업지원”, “지원고용 및 재활”은 전년대비 증액되었고,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은 전년대비 감액되었다.

【표 II-11】 2023년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

(단위: 억원, 만명, %)

유형	2022	2023			유형 비중
	예산	예산	증감	증감률	
전체	315,809	303,481	-12,327	-3.9	100.0
(1) 직접일자리	32,079	32,244	165	0.5	10.6
- 직접일자리 인원	(103.0)	(104.4)	(1.4)	(1.4)	-
(2) 직업훈련	24,785	27,301	2,516	10.1	9.0
(3) 고용서비스	18,922	17,745	-1,177	-6.2	5.8
(4) 고용장려금	65,247	50,634	-14,613	-22.4	16.7
(5) 창업지원	28,376	31,484	3,108	11	10.4
(6)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137,732	134,404	-3,328	-2.4	44.3
(7) 지원고용 및 재활	8,668	9,669	1,001	11.5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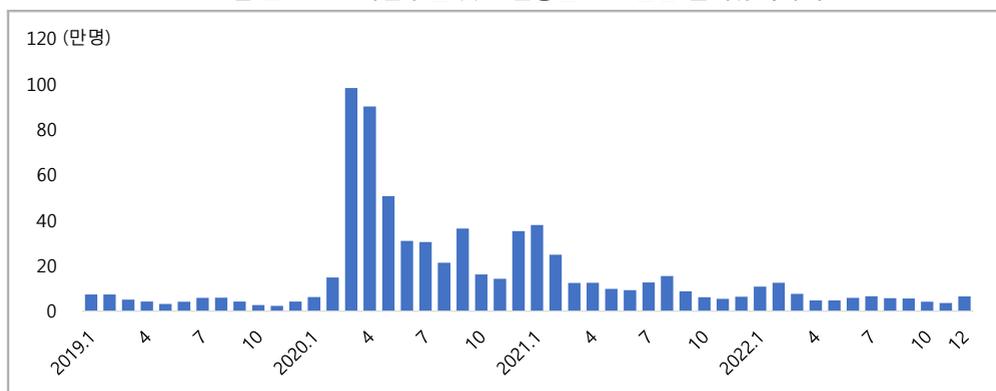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년 일자리 예산 30.3조원”, 2023.1.2.

일자리사업 중, 2023년 고용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유형에는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등이 있다. 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의 민간일자리 취업을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2023년 직접일자리 예산은 3조 2,244억원으로 전년대비 165억원(0.5%) 증액되었고, 직접일자리 인원 또한 104.4만명으로 전년대비 1.4만명 증가하였다. 지난 9월 정부에 제출된 정부의 일자리 예산안은 직접일자리 예산을 전년대비 902억원 감액하고, 직접일자리 인원 또한 7.5만명 줄인다는 계획이었으나, 국회의 심의를 통해 증액되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취업자 수 및 경제활동인구 수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번 예산에서는 증가의 정도가 작아 전년대비 2023년의 고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³⁴⁾ 다만, 직접일자리 중 노인일자리는 전년대비 3.8만개 확대되어 고령층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고용장려금은 5조 634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4,613억원(22.4%) 감액되었다. 2017~2020년 한시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계속 지원 예산 축소(-7,659억)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대되었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축소(-4,007억) 등이 고용장려금 감액의 주요 배경이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축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 예산'에서 '미래 대비 집중투자'로 고용 예산을 재구조화한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반영되어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을 목표로 한다. 2022년 기준,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수는 6.6만명으로 2020년의 37.1만명 대비 1/5 미만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예산 재구조화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43 |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4) 2023년 직접일자리 수는 전년대비 1.4만명 증가에 그쳐 2023년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23년 확정 예산과 예산안 간 직접일자리 수의 차이는 고용전망치 수정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지난 10월에 발간한 NABO 중기전망은 예산안의 정보에 기반한 반면, 이번 수정전망은 확정 예산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2023년 확정 예산의 직접일자리 수는 예산안 대비 8.9만명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 외국인력 정책 변화

정부는 2022년 발생한 일부 산업의 구인난 이후 외국인력의 도입을 확대하였다. 2022년 8월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비전문 외국인력(E-9)의 쿼터 확대 및 비자 발급자 중 대기인원과 하반기 발급예정자의 신속 입국조치를 의결하였다.³⁵⁾ 이러한 조치로 인해 2022년 E-9인력 쿼터는 기존 5.9만명에서 6.9만명으로 확대되었고³⁶⁾, 2022년 한 해 동안 약 8.4만명에 달하는 E-9 외국인력이 입국하였다.³⁷⁾ 이러한 조치의 연장으로 기존 연간 약 5~6만명 수준이었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쿼터(E-9비자)가 2023년 11만명으로 확대되었다.³⁸⁾ 또한, 2023년부터 외국인력(E-9비자)의 서비스업 허용업종이 확대되고, 방문취업동포(H-2비자)의 업종 제한이 완화되어 노동의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³⁹⁾ 노동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가 연장⁴⁰⁾되었고,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폐지하였다.⁴¹⁾

외국인력의 도입 확대 및 규제 완화 등은 고용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확대된 E-9 외국인력 쿼터에 맞춰 인력 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수는 약 5~6만명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력의 주 수요처인 제조업이 올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책 변화의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35) 관계부처 합동,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 비상경제장관회의 22-2, 2022.8.8.

36)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2022.9.5.

37)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올해 계획인 외국인근로자(E-9) 8만4천명 입국”, 2022.12.21.

38)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3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2022.10.25

39) 2023년 1월 1일부터 서비스업·광업의 방문취업동포(H-2) 고용 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허용업종 지정(포지티브)방식에서 허용제외업종 지정(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2021.12.28.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되었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의 서비스업 허용업종을 확대하여 일부 상·하차 직종에 대한 고용을 허용하였다(2023.1.3.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

40)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적용한다.

41)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3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2022.10.25

표 II-12 | 고용허가제(E-9) 연도별 도입 쿼터

(단위: 명)

구분	총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어업
2023년	110,000	75,000	3,000	1,000	21,000
2022년	69,000	51,300	2,760	100	13,840
2021년	52,000	37,700	1,800	100	9,400
2020년	56,000	40,700	2,300	100	7,400
2019년	56,000	40,700	2,300	100	7,400

주: 1.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산업별 쿼터의 합이 전체 도입인원과 일치하지 않음

2. 2022년은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통해 확대된 쿼터를 제시하였음

3. 농축산업과 어업은 쿼터가 구분되어 있지만, 표에는 두 산업의 쿼터를 합하여 제시하였음

자료: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www.eps.go.kr), 고용노동부

2023 경제전망 Ⅲ

소득부문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II

주요국 고용 동향 및 전망

제1장 한국 및 주요국 노동가능인구 전망 비교

제2장 한국 및 주요국 고용전망 비교

제1장 한국 및 주요국 노동가능인구 전망 비교⁴²⁾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는 잠재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인구의 규모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노동공급 여건을 의미한다.⁴³⁾ 이번 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UN의 World Population Prospects(2022) 등을 통해 한국 및 주요국의 노동가능인구 변화 추세를 제시하였다.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가별로 변화의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노동가능인구는 1970년대 3%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1980년대 이후 증가율은 추세적 하락을 지속하여 2005년 0.92%를 기록하였다. 이후 일시적으로 반등하여 2008년에 1.52%까지 회복하였으나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고 2022년에는 0.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001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미만)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은 지속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2023년에도 전년대비 0.02%p 하락한 0.4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구 증가세 둔화는 노동가능인구에 신규 유입되는 젊은 세대의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지속하고 있고⁴⁴⁾, 이민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가능인구는 2010년대 초반까지 1% 수준의 증가를 지속하였다. 인구의 자연증가율⁴⁵⁾ 하락 등의 영향으로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은 2013년 0.99%를 시작으로 0%대를 지속하였고, 2021년에는 1960년 이후 역대 최저인 0.64%를 기록하였다. 이는 2021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와 이민자 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2년부터 팬데믹상황 완화로 이

유근식 경제분석관(gsyoo@assembly.go.kr, 6788-4753)

42) 2023 경제전망,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2022), OECD Employment Outlook(2022)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제시된 수치 중 한국은 2022년은 실적치(통계청), 2023년은 전망치(국회예산정책처)인 반면, 주요국은 2022~2023년 모두 UN 및 OECD의 전망치를 바탕으로 한다.

43) 노동공급이 가능한 잠재 인력의 규모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통해 살펴보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 지속되는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공급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가별 노동가능인구(15세 이상)를 비교 제시하였다.

44)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1990년대 2.01명, 2000년대 2.05명, 2010년대 1.82명, 2020년 1.64명, 2021년 1.66명(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45) 자연증가율은 "출생률-사망률"을 나타낸다.

전 수준을 회복하여 상승추세로 들어섰으며, 2023년 미국의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은 0.85%로 전망된다.

영국의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은 뚜렷한 추세 없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0.3%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1973년을 기점으로 상승하여 1980년에는 0.64%까지 회복하였다. 그러나 다시 하락추세로 전환되어 1992년에는 1960년 이후 역대 최저인 0.07%를 기록하였다. 이는 1970년대 출산율 하락⁴⁶⁾의 영향이 시간이 지나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에 반영된 여파로 보인다. 2000년대부터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지만, 2016년에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EU 국적 외국인 유입인구 감소 등으로 인구성장률은 둔화하였다.⁴⁷⁾ 2023년에는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이 전년대비 0.06%p 증가한 0.64%로 전망되지만 증가율이 EU탈퇴 이전 수준⁴⁸⁾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합계출산율⁴⁹⁾을 바탕으로 낮은 수준의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1960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은 1978년의 0.63%이다. 1978년 이후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이 지속 둔화되어 2000년대 초반에는 0.15%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소폭 반등하여 코로나19 이전까지 0.1~0.2%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민자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1년부터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0.14%, 0.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의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은 1960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1%대를 유지하였다. 이는 영광의 30년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경제적 호황과 부의 축적이 있었고 그에 따른 높은 출산율⁵⁰⁾의 결과로 판단된다. 프랑스는 최근까지도 합계출산율이 1.8명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의 변동이 크지 않고 2022년에는 0.36%, 2023년에는 0.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6) 영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2.79명에서 1970년대 1.98명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47) 한국은행(2023)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6% 수준이었던 영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증가율은 2016년 브렉시트 이후 팬데믹 이전까지 연평균 1%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한국은행 런던사무소, “영국 노동시장 동향 및 전망”, 2023.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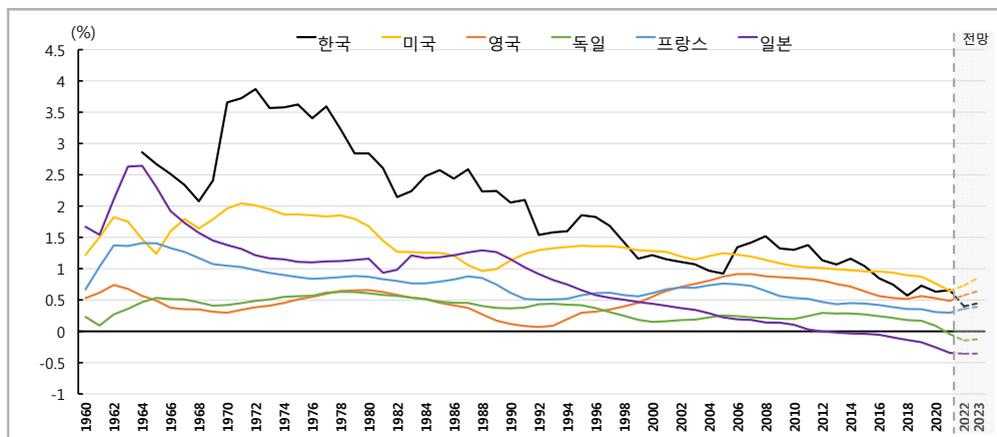
48) 브렉시트 이전 3년간(2012~2015년)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0.70%였던 반면, 브렉시트 이후 3년(2016~2019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0.54%로 하락하였다.(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49)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유럽지역 평균 1.55명, 프랑스 1.79명, 아일랜드 1.76명, 영국 1.57명, 독일 1.53명(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50)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1960년대 2.75명, 1970년대: 2.14명, 1980년대: 1.85명, 1990년대: 1.74명, 2000년대: 1.92명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일본의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은 1974년에 역대 최대인 2.64%를 기록한 이후 추세적 하락을 지속하였다. 1990년대 초반까지 1%대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0년을 기점으로 증가율이 다시 하락하였고 2012년부터 노동가능인구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일본은 세계에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장 먼저 진전되었고, 이민의 장벽이 높아 이민자의 유입도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의 현재 경제 및 저출산·초고령 상황 등을 고려하면 노동가능인구는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일본의 노동가능인구는 0.3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 일본 총인구 수는 1억명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Ⅲ-1 | 주요국 노동가능인구 변화 추이 및 전망



- 주: 1. 한국의 노동가능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기반하였고, 주요국은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의 값을 이용하였음
 2. 한국의 2023년 노동가능인구 수 전망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22년 실측치에 장래인구추계의 증가율을 활용하여 자체 추정하였음
 3. 한국은 2023년만 전망치인 반면, 한국 외 국가는 2022~2023년 값이 전망치임
 4. 한국은 연평균, 한국을 제외한 국가는 연양인구의 증가율을 제시함
 5. 2022년 이후 음영은 전망치를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제2장 한국 및 주요국 고용전망 비교

경제활동인구는 노동 공급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2022년 중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대비 2.2%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노동가능인구의 증가세 둔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 또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전년대비 1.4%p 하락한 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둔화이다.

미국의 2022년 경제활동인구는 1.9% 증가하여 제시된 주요국 중 한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3년 증가율은 전년대비 1.3%p 하락한 0.6%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경기둔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가 위축, 외국인 노동자 증가 정체⁵¹⁾ 등으로 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타난 전문직의 은퇴 증가 등의 영향으로 노동 공급이 감소⁵²⁾하여 2022년 경제활동인구는 0.2%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득 및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은퇴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인구가 증가⁵³⁾하는 등의 영향으로 2023년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대비 1.0% 증가가 예상된다.

독일의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 1.7%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0.8% 증가하여 전년대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프랑스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1.9%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23년 큰 폭으로 축소되어 일본 다음으로 낮은 0.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일본의 경제활동인구는 6개 국가 중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화 등으로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이 제약되어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⁵⁴⁾ 2023년 일본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전년대비 0.2%p 상승한 0.1%로 전망되었으나 다른 국가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51)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최근 미국 고용사정 점검 및 전망”, 2023.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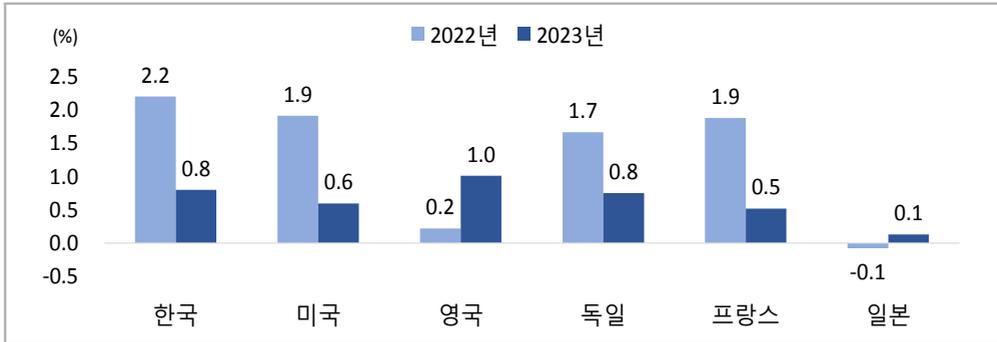
52) Murphy and Thwaites (2023), “Post-pandemic participation: Exploring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 the UK, from the Covid-19 pandemic to the decade ahead”, Resolution Foundation

53) 한국은행 런던사무소, “영국 노동시장 동향 및 전망”, 2023.1.17.

54) 오학수(2023)는 일본의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노동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오학수 (2023), 일본의 2023년 노동시장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그림 Ⅲ-2 | 주요국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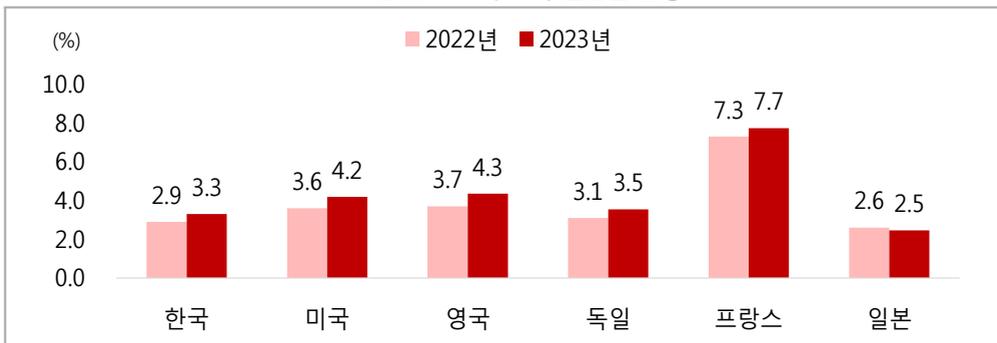


주: 한국 자료는 2022년 실적치(통계청)와 2023년 전망치(국회예산정책처)를 제시하였고, 그 외 국가들은 OECD의 2022~2023년 전망치를 제시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OECD Employment Outlook 2022

2023년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일본을 제외한 5개국(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실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기준 6개 국가 중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프랑스의 실업률은 2022년 7.3%에서 2023년에는 7.7%로 0.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영국의 실업률은 2022년에 각각 3.6%, 3.7%였으나 2023년에는 4.2%, 4.3%로 전년대비 0.6%p 상승하여 6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실업률 상승이 전망된다. 한국의 2022년 실업률은 2.9%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에는 전년대비 0.4%p 상승한 3.3%로 예상된다. 2023년 일본의 실업률은 다른 국가와 달리 전년대비 0.1%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실업률은 2% 초반 수준이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실업률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Ⅲ-3 | 주요국 실업률 전망



주: 한국 자료는 2022년 실적치(통계청)와 2023년 전망치(국회예산정책처)를 제시하였고, 그 외 국가들은 OECD의 2022~2023년 전망치를 제시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OECD Employment Outlook 2022

제3부 주요국 고용 동향 및 전망

글로벌 경기침체는 한국과 주요국의 취업자 수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본을 제외한 5개국(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취업자 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2022년 3% 이상의 높은 취업자 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의 전망치는 각각 0.5%, 0.0%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2022년 독일과 프랑스의 취업자 수는 각각 2.5%, 2.4%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전년대비 2%p 이상 하락한 0.3%, 0.1%의 증가세가 전망된다. 일본의 2023년 취업자 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증가율(0.2%)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그림 Ⅲ-4 | 주요국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



주: 한국 자료는 2022년 실적치(통계청)와 2023년 전망치(국회예산정책처)를 제시하였고, 그 외 국가들은 OECD의 2022~2023년 전망치를 제시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OECD Employment Outlook 2022

2023 경제전망 Ⅲ
- 소득 부문 -
(2023 Economic Outlook Ⅲ)

발 간 일 2023년 3월 31일

발 행 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디자인·인쇄 (주)명문기획 (tel 02·2079·9200)

ISBN 979-11-6799-117-1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96-001627-1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